
정책참고자료

2016-7호

섬기는 일하는 가까운
강원도의회

의회사무처
(수석전문위원실)



목 차



1 국민안전처

우기대비 재해예방사업장 안전관리 점검	4
----------------------	---

봄철 대형화재사고 예방을 위한 화재예방대책 추진	8
----------------------------	---

2 국민권익위원회

권익위 '이동신문고' 국민고충 찾아 전국 누빈다	10
----------------------------	----

3 기획재정부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시 산지가격 반영한다	14
-------------------------	----

4 교육부

학교 안전교육 실시 기준 확정·발표	17
---------------------	----

5 미래창조과학부

미래부, '꽃보다 디지털 어르신' 모집	23
-----------------------	----

「크라우드펀드 창조경제혁신센터 순회 설명회」 개최	25
-----------------------------	----

6 문화체육관광부

지역저작권 서비스센터 전국 7개소로 확대·운영	27
---------------------------	----

국내여행의 새로운 발견, 2016 내나라 여행 박람회 개최	29
----------------------------------	----

7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산물시장, 2020년까지 2.5조원으로 확대	37
------------------------------	----

	對할랄시장 수출확대를 위한 간담회 및 UAE할랄인증서 전달식 개최	51
8	환경부	
	국민 배심원단 운영으로 투명한 환경기술 개발 추진	56
	폐기물감량 앞장서는 친환경기업에 도전하세요	62
9	고용노동부	
	청년일자리 정책에 청년대표의 직접 참여 강화	67
10	여성가족부	
	다문화인식, 4년 전보다 개선되고 젊은층일수록 수용적	71
11	국토교통부	
	교통복지지수 평가 순위 경남, 경기, 세종, 충북 순	85
12	해양수산부	
	해수부, 국가어항 내 사고방지 위한 안전시설물 일제정비	93

우기대비 재해예방사업장 안전관리 점검

- 국민안전처 재난관리실장 재해예방사업장 현장 방문 -

- 경기도 오산시 신장지구는 매년 장마철에 오산천 수위가 상승하면 침수피해가 발생하는 곳이다. 2011년 7월 집중호우 때에는 주택 22동과 시가지가 침수되어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 올해에는 재해예방사업을 통해 우수저류조 등을 설치하여 침수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어 큰 피해가 없을 것으로 기대된다.
-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 3월 16일 경기도 오산시 신장 재해위험지구와 의왕시 오전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 현장을 잇따라 방문해 사업 진행사항을 확인하고, 안전관리 상태를 점검하였다.
 - 금번 점검은 지난 3월 6일 경북 청도에서 집중호우로 인한 저수지 공사장 범람으로 주택침수 등의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우기 전 재해예방사업 현장관리에 미비점은 없는지 점검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국민안전처 재난관리실장(김희겸)의 주관으로 실시되었다.
- 오산시 신장 재해위험지구는 장마철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오산천 수위 상승에 따른 주거지역 상습 침수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 우기 전까지 저류조 등 주요공정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시공계획 및 현장 안전관리 상태의 적정성을 확인하였다.

<신장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개요>

- ▶ 사업량 : 우수저류조(2,200m³), 관로정비 505m 등
- ▶ 사업비 : 7,103백만원('14년 300, '15년 3,086, '16년 3,717)
- ▶ 사업기간 : 2014. 1. ~ 2016. 12.

※ (과거 피해현황) '11.7.26~27일 호우(강수량 258mm), 주택 22동 및 시가지 침수

- 이어 방문한 의왕시 오전저수지 점검에서는 노후화로 붕괴 위험이 높은 재해위험저수지 정비를 위하여 우기 전까지 공사를 조기 추진하는 한편,
 - 가뭄 대비를 위한 저수량 확보를 위하여 준설공사를 우선 실시하는 등 공정관리에 노력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오전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 개요>

- ▶ 사업량 : 제당 사석보강 468.6m³, 여수로 및 방수로 보수 등
- ▶ 사업비 : 1,000백만원('15년 추경) * '15.1월 안전진단결과 D급으로 판정
- ▶ 사업기간 : 2015. 8. ~ 2016. 6.

※ 농어촌공사에 설계·공사 위탁 추진 중

- 김희겸 재난관리실장은 “자연재해에 적극 대비하기 위한 재해예방 사업을 철저히 추진하고, 집중호우에 대비한 비상대응 체계를 갖추어 수해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해예방사업장 공사현장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붙임 1

신장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현황

□ 사업 개요

- 위 치 : 경기도 오산시 은계동 38-6번지 일원(면적: 13.4만㎡)
- 사업량
 - 관로정비 L=505m, 우수저류조 설치(V=2,200m³)
 - 펌프시설 1개소(90m³/min×2대)
- 총사업비 : 7,103백만원(국비 3,552백만원, 지방비 3,551백만원)
- 사업기간 : 2014. 1. ~ 2016. 12.
-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15년까지	'16년	비고
총 사업비	7,103	3,386	3,717	
· 국 비	3,552	1,693	1,859	
· 지방비	3,551	1,693	1,858	도비 : 533 시비 : 3,018

- 정비사업효과
 - 725세대 2,100명, 건물 130동, 시가지 등 6.73ha 침수 예방

□ 현재 추진상황 : 총 공정률 35%

- 저류조 터파기 및 관로정비 등 시공 중

□ 향후 추진계획

- '16. 9월 저류조 및 펌프시설 시공 및 관로정비 완료
- '16. 12월 부대공사 완료 및 준공예정



□ 저수지 현황

- 저 수 지 명 : 오전저수지 재해위험저수지(1962년 준공)
- 위 치 :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산23-3번지 일원
- 저수용량(몽리면적) : 57천톤(10ha) * (제원) 높이 11.7m, 길이 80m (저수율) 30%
- 재해위험저수지 지정 : 2015.4.9.(D등급 : 제방 누수 및 여방수로 노후화)
- 피해 예상 현황 : 주택 및 창고 15동 약 90명

□ 사업계획

- 사업기간 : 2015. 8. ~ 2016. 6.
- 총사업비 : 1,000백만원(국 500, 도 52.5, 시군비 447.5)
- 사 업 내 용
 - 제당 사석보강 $A=468.6m^2$, 그라우팅 $L=19m$, 지중연속벽 $L=80m$
여수토 및 방수로 단면보수 $A=360m^2$, 복통 보수 $L=50.2m$

□ 추진일정

- '16.3~4월 : 저수지 보강 착공 준비 및 저수지 준설
- '16.6월 : 공사 준공



봄철 대형화재사고 예방을 위한 화재예방대책 추진

- 화재예방 · 현장대응능력 제고로 국민피해 최소화 -

-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봄철 화재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2016년 봄철 화재예방대책」을 5월31일까지 3개월간 추진한다.
- 국가화재정보센터 통계에 따르면, 겨울철 화재는 감소추세에 있으나 봄철 화재는 매년 증가추세에 있으며,
 - 겨울철 : (2012) 14,835건 → (2013) 14,746건 → (2014) 14,536건
 - 봄 철 : (2013) 12,007건 → (2014) 12,769건 → (2015) 14,299건
- 특히, '16년 봄철은 '엘리뇨'의 영향으로 예년보다 건조한 날씨가 지속될 전망으로 화재발생 위험이 높아 화재예방을 위한 소방안전 종합 대책이 필요한 시기이다.
- 이번 대책은 봄철(해빙기)에 발생빈도가 높은 사고에 대비해 관계자에 대한 사전 안전교육을 통한 자율안전관리 기능강화, 화재위험지역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등 선제적 예방활동과 소방관서 현장대응 능력 제고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사회전반에 걸쳐 안전문화가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2016년 봄철 화재예방대책 추진

□ 봄철 화재발생 현황

- 최근 겨울철 화재는 감소추세에 있으나 봄철화재는 매년 증가추세
 - 겨울철 : (2012) 14,835건 → (2013) 14,746건 → (2014) 14,536건
 - 봄 철 : (2013) 12,007건 → (2014) 12,769건 → (2015) 14,299건
- 일반화재는 들불 및 산불(25%) → 주거시설(22.1%) → 산업시설(10.6%) 순
특정소방대상물에서는 근생(35.7%) → 공동주택(23.6%) → 공장·창고(17.9%) 순

□ 추진기간 : 3.1 ~ 5. 31(3개월간)

□ 세부 추진대책

- 해빙기 공사장 안전관리 : 상주감리(3만㎡이상) 및 화재위험공사장
→ 화기안전취급, 임시소방시설 설치지도, 관계자 안전간담회 등
※ 2015년 공사장 현황(착공신고) : 40,559건 / 상주감리대상 319개소
- 신학기 방과 후 이용시설 등에 대한 소방특별조사
 - 학원·도서관, 청소년수련시설, 근린생활시설 등 59,654개소
- 관광주간 및 안심수학여행 지원
→ 숙박·체험시설(32,229개소) 등에 대한 사전위험요인 제거
- 석가탄신일 대비 사찰 등 목조문화재 안전관리 : 2,851개소
- 20대 국회의원 선거 투·개표소 안전점검
※ 사전투표기간 : '16. 4. 8. ~ 4. 9., 선거일 : '16. 4. 13.
- 봄철 산불예방 및 진압지원대책 구축 : 산불조심기간(2.1.~5.15)

👉 2016년 봄철 화재예방대책 추진기간 중 주요 행사

- ❶ 제20대 국회의원 선거(4.13), ❷ 관광주간(5.1~5.14) ❸ 석가탄신일(5.14)

권익위 '이동신문고' 국민고충 찾아 전국 누빈다

지난해 1,706건 고충민원 상담, 650건은 현장에서 해결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이하 권익위)는 지난해 전국 57개 지역에서 '이동신문고'를 운영해 1,706건의 고충을 상담하고 이중 650건을 현장에서 해결했다고 밝혔다.

'이동신문고'는 고충이나 애로가 있어도 권익위를 방문하기 어렵거나 인터넷 민원신청이 익숙하지 않은 도서·벽지·농어촌 및 민원이 빈발하는 지역을 직접 찾아다니면서 주민들의 고충과 애로를 직접 듣고 해소하는 권익위의 주요 정책 중 하나이다.

- 권익위가 지난해 이동신문고를 통해 해결한 사례는 다음과 같다.
 - (충남 당진, 1월) 초등학교 2학년인 A군은 태어날 때 의료사고로 인해 숨도 제대로 쉬지 못했고 뇌의 손상까지 있었다.

A군은 네발로 기기, 양반다리 하고 앉기 정도는 할 수 있게 되었지만 국내 여러 병원에서는 A군이 걸을 수 있을지에 대해 매우 부정적이었다. 그러던 차에 미국에 있는 한 병원의 한국계 의학박사로부터 A군이 수술을 받으면 차차 걸을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적인 결과를 들었지만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수술비는 7천만 원에 달했다.

권익위는 이동신문고를 찾은 A군의 부모와 상담 후, 사회복지협의회를 통해 수익금 1,200만원의 수술비를 후원받을 수 있도록 주선함에 따라 A군은 현재 수술을 무사히 마치고 건강하게 생활하고 있다.

- (전북 정읍, 10월) 전북 정읍시 충정로 소재 OO아파트 앞 사거리

에서 교통사고가 잦아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요구에 대해 현장 확인을 거쳐 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하기로 했다.

- (충북 진천, 11월) 충북 진천 이월면 송림리 OO아파트 주변도로가 비포장으로 되어 있어 물이 고이는 등 불편하니 이를 포장해 달라는 요구에 대해 관련예산을 확보한 후 올해 말까지 완료하기로 했다.

- 권익위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지역형 이동신문고'와 복지소의 계층·영구임대주택 임차인,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이동신문고'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맞춤형 이동신문고'를 더욱 강화해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생계형 민원을 적극 발굴하고 해결해 나갈 계획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올해도 지난달 전남지역(함평·담양)을 시작으로 25개 지자체에서 '지역형 이동신문고'를 운영하고 복지소외계층·다문화 가정·외국인근로자·군장병·중소기업 고충 및 애로사항 해소 등과 같은 사회적 약자계층의 권익보호를 위한 '맞춤형 이동신문고'도 30회 이상 전국 권역별로 수시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 (붙임2) 2016년 지역형 이동신문고 운영계획

- 권익위는 이외에 국민들의 다양한 고충과 애로를 실질적으로 해소하고 소비자 분쟁도 해결하기 위해 민·관 협업도 한층 강화한다.

제도적으로 구제받지 못하고 있는 복지사각지대 빈곤가정 등은 한국 사회복지협의회와 협업해 생필품 등을 긴급 지원함으로써 실질적인 도움을 줄 계획이다.

법률보호 소외계층에 대해서는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함께 무료 법률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소비자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소비생활 향상 등 소비자 권익증진을 위해 한국소비자원도 참여할 예정이다.



복지소외계층 이동신문고 상담 현장 (9. 18, 경남 함양)



북한이탈주민 대상 이동신문고 상담 현장 (10. 15, 경기 성남)

붙임2

2016년 지역형 이동신문고 운영일정 계획

월 별	권역별	운 영 지 역		비 고
계		25개 지방자치단체		
1월	전 남	2	함평군(1.21), 담양군(1.22)	
4월	대구, 울산, 경 북	4	대구 중구(4.19), 울산 중구(4.20), 포항시(4.21), 영덕군(4.22)	
5월	강원	2	속초시(5.19), 횡성군(5.20)	
6월	부 산	2	해운대구(6.23), 진 구(6.24)	
7월	서 울	2	강동구(7.21), 서대문구(7.22)	
8월	충 북	2	제천시(8.25), 영동군(8.26)	
9월	충 남	2	서산군(9.22), 부여군(9.23)	
10월	경기, 인천	3	수원시(10.19), 안양시(10.20), 인천 남동구(10.21)	
11월	광주, 전·남북	4	장흥군(11.15), 광주 서구(11.16), 김제시(11.17), 순창군(11.18)	
12월	대 전	2	대덕구(12.15), 유성구(12.16)	

※ ()는 일자, 맞춤형 이동신문고는 별도로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예정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시 산지가격 반영한다

- 2016년 제1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 개최 -

◇ 총 2,700명 수준의 공공기관 비정규직 등의 고용개선 추진으로 사회전반의 비정규직 고용개선 선도

◇ 산지전용허가를 받는 해당 산지의 가격에 차이가 남에도 동일한 금액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어 형평성이 떨어지고 있는 점을 보완하여 개별공시지가의 일부를 반영

□ 기획재정부는 3월 11일 제1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위원장: 송언석 기재부 제2차관)를 개최하여,

○ 부담금 제도개선방안 추진계획 및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요율 조정 등의 안건을 논의하였다.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담금 요율 조정 】

□ (부담금 현황) 산지 전용허가 등에 따라 훼손되는 산림 자원을 대체 조성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부과하고 있으며, '15년 징수실적은 1,190억원 수준이다.

□ (요율조정) 산지관리법 개정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부과기준*에 전용산지 개별공시지가의 일부(1%)를 반영한다.

* 부과기준: 단위면적당 금액 × 산지전용허가 면적 + 개별공시지가의 일부(1%)

□ (기대효과) 개선된 산정방식을 적용할 경우 '16년 부담금은 전년 대비 약 94억원 증가(1,190→1,284억원)할 것으로 전망된다.

【 부담금 제도개선방안 추진계획 】

- ① (장애인고용부담금) 기업이 필요로 하는 '직업능력을 갖춘 장애인'을 양성하기 위해 직업훈련 인프라 확충 등의 사업* 비중 확대를 추진한다.

* 발달·감각장애인 훈련센터 등 장애인의 수요에 맞는 직업훈련 인프라 확충,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등

※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장애인고용촉진기금의 '15년 사업비 2,136억원 중 직업훈련 사업은 175억원(8.2%) 수준

- ② (학교용지부담금*) 학교용지 매입을 위해 징수한 부담금을 지자체가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 법령 및 조례 개정 등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 개발사업지역 100세대 이상의 단독주택 건축을 위한 토지 또는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자에게 부과하고 학교용지 매입에 사용('14년 징수실적 3,749억원)

** '14년 기준 부담금의 57.6%만 특별회계로, 42.4%는 지자체 일반회계로 세입 처리

- 학교용지부담금을 일반회계로 운용하고 있는 9개 시·도*에 대하여 전액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로 운용하도록 하되,

*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울산, 경남, 전북, 전남, 제주

- 학교용지매입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자체와 교육청이 각각 1/2씩 부담하고 있으므로,

- 교육청이 학교용지 구입비용을 과다하게 책정하지 않도록 지자체 장이 교육청의 학교용지부담금 적정 사용 여부를 사후에 점검하는 방안 등을 마련한다.

③ (국제빈곤퇴치기여금) 최빈국의 질병 및 빈곤퇴치 지원등을 위해 국제선 항공권 구입시 1천원씩 부과하고 있는 기여금을 좌석 등급별로 차등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 프랑스는 국제빈곤퇴치기여금과 유사한 성격의 항공권연대 기여금을 좌석등급별*로 차등부과하고 있으며,

* 일반권과 비즈니스석의 차이는 10배

< 한국과 프랑스의 국제빈곤퇴치기여금 비교 >

(단위: 원)

	한 국		프랑스	
	국제선	국내선	국제선	국내선
1등석 · 비즈니스석	1,000	-	53,261(40€)	13,315(10€)
일반석	1,000	-	5,326(4€)	1,331(1€)

('16.3.8. 기준 환율: 1€=1,331.53원)

○ 여권 발급시 징수하는 국제교류기여금도 유효기간별로 차등 부과*하고 있는 사례를 고려한 것이다.

* 유효기간 10년: 1만5천원, 유효기간 5년: 1만2천원

학교 안전교육 실시 기준 확정·발표

- 체험 중심 안전교육 시간, 횟수, 내용, 방법 등에 대한 기준 마련 -

□ 교육부는 3월 15(화), 학생의 발달단계에 맞는 체계적인 학교 안전교육 실시를 위하여 「학교 안전교육 실시 기준 등에 대한 고시」를 확정·발표한다고 밝혔다.

- 학교 안전교육 실시 기준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서 교육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으로,
- 「교육분야 안전 종합대책」(‘14.11)에 따라 학교에서 시행 중인 안전교육 7대 표준안*을 보다 구체적이고 효율적으로 실시하도록 교육 시간, 횟수, 내용 및 방법 등을 고시에 담고 있다.

* 7대 표준안 : 생활/교통/폭력 및 신변/약물 및 사이버 중독/재난/직업/응급처치

□ 특히 이번 학교 안전교육 고시안은 학생들의 발달단계를 고려한 현장 중심의 안전교육이 실시되도록 하기 위하여,

- 작년 51개 안전교육 연구학교의 추진성과를 바탕으로, 전국 68명의 유·초·중·고 교원모니터링단의 구체적인 검토와 정책연구*를 종합적으로 거쳐서 기준안을 마련하였다.

* 성신여대 학교안전정책중점연구소(김경희 소장, '15.10~'16.1)

□ 이번 안전교육 실시 기준은 이론 및 강의 중심의 안전교육에서 벗어나 학생들에게 안전 7개 영역*에 걸쳐 체험 중심의 안전교육을 학년 당 51차시 이상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 학교별 운영 성격 및 지역적 특성에 따라 맞춤형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기준을 제시하였다.

※ 총 이수시간(51)의 범위 내에서 안전 7대 영역별 20% 범위 내 증감 운영

(예시) 초등학교의 생활안전은 12시간, 교통안전 11시간으로 구성되었지만 초등학교의 여건 및 지역적 특성(대도시, 농산어촌 등)에 따라 1학년에서 생활안전을 10시간, 교통안전을 13시간으로 증감 운영 가능

- 또한, 개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교 안전 교육 시간을 하나로 통합·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학교의 부담을 최소화하였다.

* 아동복지법, 학교폭력예방법, 성폭력방지법 등

<학년별 학생 안전교육 시간 및 횟수>

구분		생활안전	교통안전	폭력예방 및 신변보호	약물 및 사이버 중독 예방	재난안전	직업안전	응급처치	총계(차시)
교육 시간	유치원	13	10	8	10	6	2	2	51
	초등학교	12	11	8	10	6	2	2	51
	중학교	10	10	10	10	6	3	2	51
	고등학교	10	10	10	10	6	3	2	51
횟수		학기당 2회 이상	학기당 3회 이상	학기당 2회 이상	학기당 2회 이상	학기당 2회 이상	학기당 1회 이상	학기당 1회 이상	

※ 1차시의 수업 시간은 교육과정(초 40분 중 45분, 고 50분)을 따르되, 기후 및 계절, 학생의 발달정도, 학습 내용의 성격, 학교 실정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편성·운영할 수 있다.

※ 강의, 시청각 교육 등의 이론 방법 외에 실습과 현장학습, 역할극 등의 체험중심의 교육 방법을 적용한다.

- 교육부는 안전교육 실시 기준 마련을 통해 학교 안전교육이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내실화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을 확대해 나아갈 계획이다.

- 이를 위해 학생과 교사의 눈높이에 맞는 체험 중심의 안전교육 지도안 및 워크북을 신학기에 맞춰 개발·보급*하였으며,

* 안전교육 7대 표준안('15.3)에 기반한 교사용 지도안 및 학생용 워크북을 학년 당 51차시씩 총 765차시 개발·보급('16.3월)

- 안전점검의 날(매월 4일) 및 매주 5분 안전교육에 활용할 수 있도록 동영상, 애니메이션 등 다양한 형식의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여 ‘학교안전정보센터*’를 통해 학교에 보급할 예정이다.

* <http://www.schoolsafe.kr>

- 교육부 이경희 교육안전정보국장은 “현장과 소통하는 안전교육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교사 중심의 안전교육 모니터링단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학생이 머무르는 곳이 가장 안전한 곳이 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본다”라고 밝혔다.

붙임. 학교안전교육 실시 기준 등에 대한 고시(안)

【별표1】

학년별 학생 안전교육의 시간 및 횟수

(단위: 단위활동, 차시)

구분		생활안전교육	교통안전교육	폭력예방 및 신변보호교육	약물 및 사이버 중독 예방 교육	재난안전교육	직업안전교육	응급처치교육
교육 시간	유 치 원	13	10	8	10	6	2	2
	초 등 학 교	12	11	8	10	6	2	2
	중 학 교	10	10	10	10	6	3	2
	고 등 학 교	10	10	10	10	6	3	2
횟수		학기 당 2회 이상	학기 당 3회 이상	학기 당 2회 이상	학기 당 2회 이상	학기 당 2회 이상	학기 당 1회 이상	학기 당 1회 이상

- 참고: 1.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 및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재외 한국학교와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특수학교의 경우는 인정되는 학력에 해당하는 학교급에 맞추어 실시한다.
2. 학교안전교육 실시 시간의 단위는 유치원은 교육과정 고시에 따른 단위활동이며, 초·중등학교는 교육과정 고시에 따른 차시이다.
3. 학교급별 제시하는 안전교육 시간은 학년별(유치원은 연령별) 실시해야 할 시간을 말하며, 횟수는 영역별 안전교육 시간을 학기당 제시된 횟수 이상으로 분산·실시해야 함을 말한다.
4. 학교(유치원 포함) 운영 성격 및 지역적 특성에 따라 총 이수시간의 범위 내에서 안전영역별 이수 시간을 자율적으로 조정·운영(20% 범위 내, 소수점은 올림처리)할 수 있다.
5. 1단위활동 및 1시간(차시)의 수업 시간은 교육과정을 따르되, 기후 및 계절, 학생의 발달정도, 학습 내용의 성격, 학교 실정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편성·운영할 수 있다.

【별표2】

학생 안전교육 내용 및 방법

구분	생활안전 교육	교통안전 교육	폭력예방 및 신변보호교육	약물 및 사이버 중독 예방 교육	재난안전 교육	직업안전 교육	응급처치 교육
교육 내용	유 치 원	1. 교실, 가정, 등 하곳길에서 안 전 하게 생 활 하기 2. 안전한 장소를 알고 안전하게 놀이하기 3. 놀이기구나 놀 잇감, 도구의 바 른 사용법을 알 고 안전하게 사 용하기 4. 실종, 유괴, 미 아 상황 알고 도움 요청하기 5. 몸에 좋은 음식, 나쁜 음식 알기	1. 표지판 및 신호 등의 의미 등 교 통안전 규칙 알 고 지키기 2. 안전한 도로 횡단법 알기 3. 어른과 손잡고 걷기 4. 교통수단(자전거, 통학버스 등) 안전하게 이용 하기	1. 내몸의 소중함 과 정확한 명 칭 알기 2. 좋은 느낌과 싫 은 느낌 알기 3. 성폭력 예방 및 대처방법 알기 4. 나와 내 주변사 람(가족, 친구 등)의 소중함을 알고 사이좋게 지내기 5. 아동학대 신고 및 대처방법 알기	1. 올바른 약물 사용법 알기 2. 생활주변의 해 로운 약물·화 약제품 만지거 나 먹지 않기 3. T.V, 인터넷, 통 신기기(스마트 폰 등) 등의 중 독 위험성을 알 고 바르게 사용 하기	1. 화재의 원인과 예방법 알기 2. 화재 발생 시 유의사항 및 대처법 알기 3. 각종 자연 재난 및 사고 적절하 게 대처하는 방 법 알기	1. 응급상황 알기 및 도움 요청하 기 2. 119신고와 주 변에 알리기 3. 손씻기와 소독 하기 등 청결 유지 하기 4. 상황별 응급처치 방법 알기
	초 등 학 교	1. 안전하게 교실 기점 공공시설 이용하기 2. 학용품·놀이용품의 안전한 사용 및 식 품안전 알기 3. 실험·실습 시 안 전에 유의하기 4. 안전한 놀이활동 및 야외 활동 5. 유괴예방 미아도 예방과 대처	1. 안전한 통학로 알기 2. 교통수단(자전 거, 대중교통 등)의 안전한 이용법 알기 3. 교통 표지판 등 도로 교통 법규 알기	1.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처법 알기 2. 학교폭력의 종류를 알고 종류별 예방 법 알기 3. 성폭력 예방 및 대 처방안 알기 4. 내 몸의 소중함을 알기 5. 아동학대의 유형 및 대처방안 알기 6. 가족폭력의 개념과 대처방안 알기	1. 약물 오남용의 위험성 및 올 바른 약물 복 용법 알기 2. 중독성 물질을 알고 안전한 활용 방법 3. 건전한 사이버 통제 능력 배양 및 사용습관 형 성하기	1. 화재의 원인 및 대피요령, 신 고, 전파요령 알기 2. 화상 대처 요령 알기 3. 각종 자연 재난 과 안전한 행동 알기 4. 폭발 및 붕괴, 테러 위험 유형별 대처 요령 알기	1. 응급처치의 상 황, 의미, 중요 성, 신고·조치 방법 알기 2. 심폐소생술 및 자동제세동기의 사용법 알기 3. 상처의 종류와 응급처치 하기 4. 일상생활 속 응 급처치 알기
	중	1. 공공시설 이용	1. 이륜차의 안전	1. 학교폭력의 유형	1. 향정신성 물질에	1. 화재의 원인 및	1. 직업 안전 문

학 교	시 안전과 에티켓 알기	한 이용과 점검방법 알기	과 현황 및 위험성 인식하기	대한 위험성·피해 알기	대피·대응요령, 신고, 전파요령 알기	화의 필요성	황, 의미, 중요성, 신고·조치 방법 알기
	2. 식품의 종류에 따른 안전한 보관 방법 알기	2. 자동차 사고의 원인과 예방방법 알기	2. 학교 폭력 유형별 신고·대처방법 알기	2. 중독성 물질에 대한 위험성·피해 알기	2. 화상 대처 요령 알기	2. 산업 재해의 의미·유형과 사례별 발생 현황 이해하기	2. 심폐소생술 및 자동제세동기의 사용법 알기
	3. 실험·실습 및 체육·여가 활동의 안전규칙을 이해하고 바른 사용법 알기	3. 대중교통 이용 안전수칙 알기	3. 자살예방 및 스트레스 점검과 해소 방법 알기	3. 인터넷 게임 사용 규칙 만들기 및 실천	3. 각종 자연 재난과 안전한 행동 알기	3. 안전장비의 올바른 사용방법 알기	3. 상처의 종류와 응급처치 하기
고 등 학 교	4. 실종, 유괴, 미아 상황 알고 예방하기		4. 가족과 올바른 의사소통방법과 가정 폭력 피해자 지원 제도 알기(이동학 대 포함)	4. 스마트폰의 안전한 사용 방법	4. 폭발 및 붕괴, 테러 위험 유형별 대처 요령 알기		4. 일상생활 속 응급처치 알기
	1. 기호식품의 특성·유해성 및 전기·전자제품의 안전한 사용 방법 알기	1. 이륜차의 안전한 이용과 점검 방법 알기	1. 학교폭력의 유형과 현황 및 위험성 인식하기	1. 향정신성 물질에 대한 위험성·피해 알기	1. 화재의 원인 및 대피·대응요령, 신고 전파요령 알기	1. 직업병의 진단, 예방 및 대처방안 알기	1. 응급처치의 상황, 의미, 중요성, 신고·조치 방법 알기
	2. 실험·실습 안전 수칙 이해 및 보호장구의 바른 사용법 알기	2. 자동차 사고의 원인과 예방방법 알기	2. 학교 폭력 유형별 신고·대처 방법 알기	2. 중독성 물질에 대한 위험성·피해 알기	2. 화상 대처 요령 알기	2. 작업장의 안전 수칙 및 보호장비 알기	2. 심폐소생술 및 자동제세동기의 사용법 알기
교 육 방 법	3. 체육 및 여가 활동의 안전한 활동 방해 시 대처방법 알기	3. 대중교통 이용 안전수칙 알기	3. 성폭력 예방과 대처방법 알기	3. 인터넷 게임 사용 규칙 만들기 및 실천	3. 각종 자연 재난과 안전한 행동 알기	3. 산업 재해의 의미·유형과 사례별 발생 현황 이해하기	3. 상처의 종류와 응급처치 하기
	4. 실종, 유괴, 미아 상황 알고 예방하기		4. 성매매의 위험성과 구조 및 신고 방법 알기	4. 스마트폰의 안전한 사용 방법	4. 폭발 및 붕괴, 테러 위험 유형별 대처 요령 알기		4. 일상생활 속 응급처치 알기
	1. 전문가 또는 담당자 강의	1. 전문가 또는 담당자 강의	1. 전문가 또는 담당자 강의	1. 전문가 또는 담당자 강의	1. 전문가 또는 담당자 강의	1. 전문가 또는 담당자 강의	1. 전문가 또는 담당자 강의
교 육 방 법	2. 시청각 교육	2. 시청각 교육	2. 장소·상황별 역할극 실시	2. 시청각 교육	2. 시청각 교육	2. 시청각 교육	2. 시청각 교육
	3. 실습교육 또는 현장학습	3. 실습교육 또는 현장학습	3. 시청각 교육	3. 사례 분석	3. 실습교육 또는 현장학습	3. 실습교육 또는 현장학습(직장 견학 또는 직업체험)	3. 실습교육 또는 현장학습
	4. 일상생활을 통한 반복 지도 및 부모 교육	4. 일상생활을 통한 반복 지도 및 부모 교육	4. 사례 분석		4. 사례 분석	4. 사례 분석	4. 사례 분석

미래부, ‘꽃보다 디지털 어르신’ 모집

- 2016년도 ‘어르신 IT봉사단’ 운영기관 모집 -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이하 미래부)는 장노년층에게 IT를 통한 사회참여 및 재능 기부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2016년도 어르신 IT 봉사단 운영 기관’을 3월16일부터 3월31일까지 모집한다.
- 어르신 IT봉사단사업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장노년층의 사회참여와 일자리 제공, 복지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개인과 사회의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려는 새로운 노인복지전략인 디지털 에이징(Digital Ageing)의 대표적 사례에 해당된다.
 -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10여년간 총 1,400여명의 어르신들이 봉사단원으로 선정되어, 2만여명의 동료 어르신들에게 교육과 봉사활동을 펼쳐 왔다.
- 봉사단은 일정 수준의 정보활용능력을 갖춘 55세 이상 어르신 3~5명이 팀을 구성하여 노인교실, 경로당, 독거노인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IT봉사활동을 실시한다.
 - 어르신 IT봉사단은 컴퓨터와 인터넷에 능숙한 어르신이 동년배의 어르신에게 같은 눈높이에서 1대1 맞춤교육을 진행한다.
 - 또한, 컴퓨터, 모바일, 인터넷 활용 등 기초단계의 정보화교육 외에도 영상 뉴스, 디지털 콘텐츠 제작 및 활용, 독거노인 영정사진 촬영, 정보기기 수리 및 정비, 소상공인 홈페이지 관리 및 운영 등 다양한 IT 봉사활동을 전개하게 된다.
- 2016년도 어르신 IT 봉사단에 참여할 기관 및 단체를 대상으로 3월 31일

(목)까지 신청을 받고, 심사를 통하여 최종 20여개팀(100명)을 선정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정보화교육 홈페이지(www.itstudy.or.kr) 및 한국정보화진흥원 사업담당자(064-909-3015)를 통해 확인·안내받을 수 있다.

- 선정된 봉사단 운영기관에게는 소정의 지원금 및 정보화교육 교재를 지원하게 되며, ‘어르신 IT봉사단’은 4월부터 11월까지(8개월간) 진정한 IT동반자가 되어 봉사활동을 하게 된다.
- 미래창조과학부 정보보호정책관 송정수 국장은 “고령화 사회의 진입을 맞아, 어르신들의 일자리 창출과 활동적 사회참여는 핵심적 사회과제가 되었다”며, “미래부는 어르신 IT 봉사단 등 다양한 정보화 정책을 통해 고령층을 포함한 우리사회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크라우드펀딩 창조경제혁신센터 순회 설명회」 개최

- 전국 창조경제혁신센터 대상으로 1월 25일부터 시행된 크라우드펀딩 제도, 지원정책, 및 참여방법 등 교육 실시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와 민관합동 창조경제추진단은 ‘크라우드펀딩 창조경제 혁신센터 순회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순회설명회는 경기 창조경제혁신센터(3월 14일)에서 시작하여 충북, 강원, 전북, 경남 등의 순으로 전국 창조경제혁신센터 순회 방문 형식으로 진행된다.(붙임 참조)
 - 본 순회설명회는 지난 1월 시행된 ‘크라우드펀딩’제도에 대하여 금융위, 미래부, 중기청, 금감원 등 관계부처는 물론, 오픈트레이드(주), (주)와디즈, (주)유캔스타트, (주)인크, (주)신화웰스펀딩 등 현재 크라우드펀딩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는 주요기업들이 참여하며,
 - 크라우드펀딩 개념, 참여방법, 제도, 정부 지원정책, 성공사례 등 크라우드펀딩에 참여하고자 하는 예비 발행기업이나 개인 투자자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내용을 망라하여 알기쉽게 전달할 예정이다.
- ‘크라우드펀딩’(CrowdFunding)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다수의 개인들(Crowd)로부터 초기기업들이 투자자금을 유치하는(Funding) 방식을 의미하며, 스타트업을 위한 혁신적인 자금조달 창구로서 각광받고 있다.
 - 해외에서는 이미 대표적인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을 중심으로, 자금 조달이 어려운 스타트업들이 우량 벤처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자금조달의 젓줄 역할을 하고 있다.
- 순회설명회는 크라우드펀딩에 관심있는 기업이나 개인이면 누구나 자유롭게 자신에게 편한 날짜와 장소를 골라 무료로 참가할 수 있으며, 설명회 관련 보다 자세한 사항은 ‘창조경제혁신센터 홈페이지 (ccei.creativekorea.or.kr) 내 새소식 - 공지사항’을 참고하면 된다.

□ 크라우드펀딩 순회설명회 일정 및 장소

차수	일 자	장 소	대 상 권역	비 고
1차	3. 14(월)	경기 창조경제혁신센터	수도권	
2차	4. 8(금)	포항 창조경제혁신센터	포항, 경북	
3차	4. 21(목)	충북 창조경제혁신센터	충북	
4차	4. 25(월)	강원 창조경제혁신센터	강원	
5차	5. 9(월)	전북 창조경제혁신센터	전북	
6차	5. 25(수)	경남 창조경제혁신센터	부산, 경남	
7차	6. 10(금)	제주 창조경제혁신센터	제주	
8차	7. 8(금)	인천 창조경제혁신센터	수도권	
9차	8. 10(수)	충남 창조경제혁신센터	대전, 충남, 세종	
10차	9. 9(금)	경북 창조경제혁신센터	대구, 경북	
11차	9. 23(금)	울산 창조경제혁신센터	울산, 경남	
12차	10. 7(금)	전남 창조경제혁신센터	광주, 전라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가능

□ 순회설명회 프로그램

시간	내 용	비 고
13:30~14:00	참석자 등록	
14:00~14:30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개요 및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 유의사항	금융위원회 & 금융감독원
14:30~15:00	엔젤투자 지원정책	중소기업청
15:00~15:30	크라우드펀딩 온라인 플랫폼 소개 및 참여방법 안내	온라인중개업자*
15:30~16:10	Q&A	

* 자본시장법에 의해 적격하게 등록된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참여

지역 저작권 서비스센터 전국 7개소로 확대 · 운영

- 중소기업 저작권 서비스 강화를 위한 서비스센터 2개소 추가 선정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이하 문체부)는 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저작권 서비스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저작권 서비스센터를 기존 5개소에서 7개소로 확대, 운영한다.

문체부는 최근 공모를 통해 ‘중소기업 저작권 서비스센터’의 신규 운영 기관으로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과 강릉과학산업진흥원을 선정하였다. 이로써 더욱 촘촘한 전국적 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외 지역이었던 대구·경북 및 강원 지역에 대한 중소기업 저작권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

중소기업 저작권 서비스센터는 2014년도에 처음 운영되어 올해 3년째를 맞이하고 있으며, 전국에 총 5개소(경기 · 부산 · 전북 · 충북 · 전남)가 설치, 운영되고 있다.

저작권 서비스센터는 저작권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 및 상담을 비롯해 멘토링 서비스, 법률 자문, 전문가 협력 연계망(네트워크) 구성을 통한 저작권 사업화 지원 등 중소기업들이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저작권 지원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앞으로는 저작권을 기반으로 하는 스타트업 기업 등을 적극적으로 발굴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저작권 서비스센터는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저작권 서비스 지원을 확대 · 강화하는 것은 물론, 각 지역 저작권 서비스센터의 특성에 맞는 ‘저작권 창조기업’을 적극 발굴해 콘텐츠 개발 단계에서부터 상품화에 이르기까지 단계별로 저작권 관련 지원을 체계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문체부 정책담당자는 “중소기업의 저작권 서비스 지원에 대한 수요와 기대가 커지고 있는 만큼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저작권 서비스 센터’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기업에 실질적 도움이 되고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국내여행의 새로운 발견, 2016 내 나라 여행 박람회 개최

- 3월 10일부터 13일까지 코엑스에서 열려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이하 문체부)는 3월 10일(목)부터 3월 13일(일)까지 나흘간 서울 코엑스(3층 홀 C, D1)에서 '2016 내 나라 여행 박람회'를 개최한다. 문체부가 주최하고 한국관광협회중앙회(회장 김홍주)가 주관하는 '내 나라 여행 박람회'는 2004년 처음 개최된 이래로 올해 13회를 맞이하는 행사로서 매년 10만 명 이상이 방문하는 유일한 국내여행 박람회로 성장하고 있다.

'내 나라, 새로운 발견!'이라는 주제로 숨겨진 국내 관광콘텐츠 소개

'내 나라, 새로운 발견!'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박람회는 지방자치단체와 여행사 등 360여 개 기관이 참가하여 650여 개의 부스 규모로 진행되는 역대 최대 규모의 행사다. 박람회는 ▲국내여행의 새로운 매력을 모아둔 '내 나라 테마마을'과 ▲지자체 주요 관광지, 축제 등 지역 관광자원을 소개하는 '내 나라 홍보마을', ▲국내 여행상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내 나라 정보마을'로 구성된다. 이 외에도 다양한 체험상품을 접할 수 있는 '내 나라 체험마을'과 지역 특산품을 구매할 수 있는 '내 나라 쇼핑마을'도 준비되어 있다.

특히 '내 나라 테마마을'의 주제관에서는 국내여행의 새로운 즐거움을 찾아 떠나는 다양한 여행 유형을 소개하고 있다. 주제관은 ▲골목여행과 시장여행 등 일상 속 새로운 즐거움을 찾아 떠나는 '우리 동네 여행' 존과 ▲기차, 버스, 지하철, 배 등을 이용하여, 차 없이 떠나도 편리하고 즐거운 '대중교통 여행' 존, ▲바쁜 일상 속 잠시 여유를 가지고 마음을 재충전할 수 있는 여행을 소개하는 '쉽표 여행' 존, ▲전통문화, 배움, 예술, 봉사활동을 통해 여행에 또 다른 가치를 더하는 '플러스알파(+α) 여행' 존으로 구성되어 있다. 관람객들은 이곳에서 자신의 취향에 맞는 최신 여행의 흐름을

만나볼 수 있다. 또한 관람객들이 가상현실(VR) 기어와 스마트폰을 이용해 가고 싶은 여행지를 가상현실로 생생히 체험할 수 있는 ‘가상 여행’ 존도 마련되어 있다.

문체부가 인증한 우수 관광 콘텐츠에 대한 별도의 볼거리 제공

이 외에도 이번 박람회에서는 문체부가 선정 또는 인증하는 국내의 우수한 관광콘텐츠를 만날 수 있다. 특히 2016 올해의 관광도시로 선정된 제천과 통영, 무주의 도시별 특색 있는 콘텐츠와 국내 대표 관광지인 한국관광 100선과 2016 문화관광축제에 대한 정보도 제공하여 국내여행에 대한 관람객들의 관심을 유도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역주민 주도형 관광사업 운영체인 관광두레 홍보관이 조성되는 등 이번 박람회는 그 어느 때보다 다양한 국내관광 우수 콘텐츠를 박람회장 구석구석에 배치해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정보 제공뿐 아니라 다양한 체험이벤트 및 강연, 공연도 함께 진행

특히 이번 박람회는 관람객들이 단순히 전시 콘텐츠를 눈으로 보기만 할 뿐 아니라 직접 소통하고 만들 수 있도록 하여, 관람객들이 더욱 재미있고 흥미롭게 즐길 수 있다. 과제(미션) 수행을 통해 내 나라 홍보마을을 체험할 수 있는 ‘내 나라 여행마블’과 아이들과 함께 실제 마을의 벽 꾸미기에 활용될 타일에 그림을 그려보는 ‘볼론투어 벽화 타일 그리기’, 보릿대를 활용하여 여치집, 용마루 등을 만들어 보는 ‘짚풀공예체험’, 손물레를 활용한 ‘옹기 만들기 체험’ 등 지역 문화를 느낄 수 있는 다양한 체험 행사들이 준비되어 있다.

아울러 국내여행의 또 다른 재미와 팁을 얻고 싶다면 한국여행작가협회 소속 작가들의 릴레이 강연을 들어보는 것이 좋다. 이번 강연에서는 작가들이 다양한 주제를 통해 관람객들에게 이 땅을 누비며 담아 온 여행 이야기를 들려줄 예정이다. 강연에 참가하는 관람객들에게는 제철 여행지와 여행하는 방법, 맛, 볼거리, 체험 여행 등 작가들의 생생한 경험담과 노하우를 얻고 아름다운 사진들을 감상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한편 강연장 옆

상담장에서는 여행작가가 직접 추천하는 국내 여행지와 여행 방법에 대한 조언도 들을 수도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2016년에는 국내여행을 통해 국민들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 여행객들이 관광하기 좋은 여건을 조성하고, 한국 관광의 매력을 재발견할 수 있도록 특색 있는 관광 콘텐츠를 집중적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올해에도 국내여행에 대한 많은 관심을 부탁한다.”라고 밝혔다.

- 붙임 1. 2016 내 나라 여행박람회 개최 계획
2. 2016 내 나라 여행박람회 포스터

□ 행사 개요

- 시기/장소 : '16. 3. 10.(목)~13(일)/ 코엑스 3층 C, D1홀
- * 개막식 : '16. 3. 10.(목) 14:00~14:30/ 코엑스 3층 C홀 입구
- 슬로건 : 내 나라, 새로운 발견!
- 주최/주관 : 문화체육관광부 / 한국관광협회중앙회
- 후 원 : 행정자치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문화재청, 한국관광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방문위원회 등

박람회 구성 : 360여개 업체, 650여개 부스



공식행사

- 개막식(3/10)

전시행사

- 내 나라 테마마을
 - 주제관
 - 기획관
- 내 나라 홍보마을
- 내 나라 정보마을
- 내 나라 체험마을
- 내 나라 쇼핑마을

부대행사

- 여행무대 이벤트
 - 여행작가 강연회
 - 문화관광축제 공연 등
- 설명회
 - 여행사 대상 지자체 인센티브 설명회
 - 창조관광기업 설명회
- 체험관광 사진전

□ 주요 전시내용

○ 내나라 테마마을

- (주제관) 일상 속에서 만나는 여행을 주제로 '우리동네 여행', '대중 교통 여행', '쉽포 여행', '+α 여행', '가상여행' 테마관 운영
- (기획관) 정부 인증 주요 관광 콘텐츠 소개

구 분	주요 내용
창조관광기업관	창조관광기업 홍보 및 기업 콘텐츠 체험 운영
올해의 관광도시	올해의 관광도시 홍보 및 관광도시 방문 유도
문화관광축제	축제 소개 및 체험의 장으로 관람객들에게 정보와 재미를 함께 선사하여 축제에 대한 흥미 유발
관광두레	관광두레 브랜드 및 주민 공동체 관광상품 홍보마케팅
시티투어	2016 선정 지자체 시티투어 관광의 홍보 및 시티투어 관광의 특징과 장점 홍보
관광100선	2015년 최종 선정된 '한국관광100선' 관광지 홍보 및 다양한 정보제공을 통해 실질적인 방문객 증대 유도
문화가있는날	문화가 있는 날 사업 소개 및 문화혜택 안내

○ 내나라 홍보마을(지자체관)

- 지역 관광자원의 권역별 소개로 지역 관광 활성화 촉진

○ 내나라 정보마을

- 휴양림, 농촌관광지, 템플스테이, 생태마을 등과 같은 다양한 여행 정보 제공과 여행상품 추천 및 판매 등 실질적 여행 소비 유도

○ 내나라 체험마을

- 유리공예, 돌하르방 인형 만들기, 나무 오카리나 만들기 등 아이들부터 어른까지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운영

○ 내나라 쇼핑마을

- 전통공예품, 도자기, 식품 등 지자체 대표 특산물이 모인 장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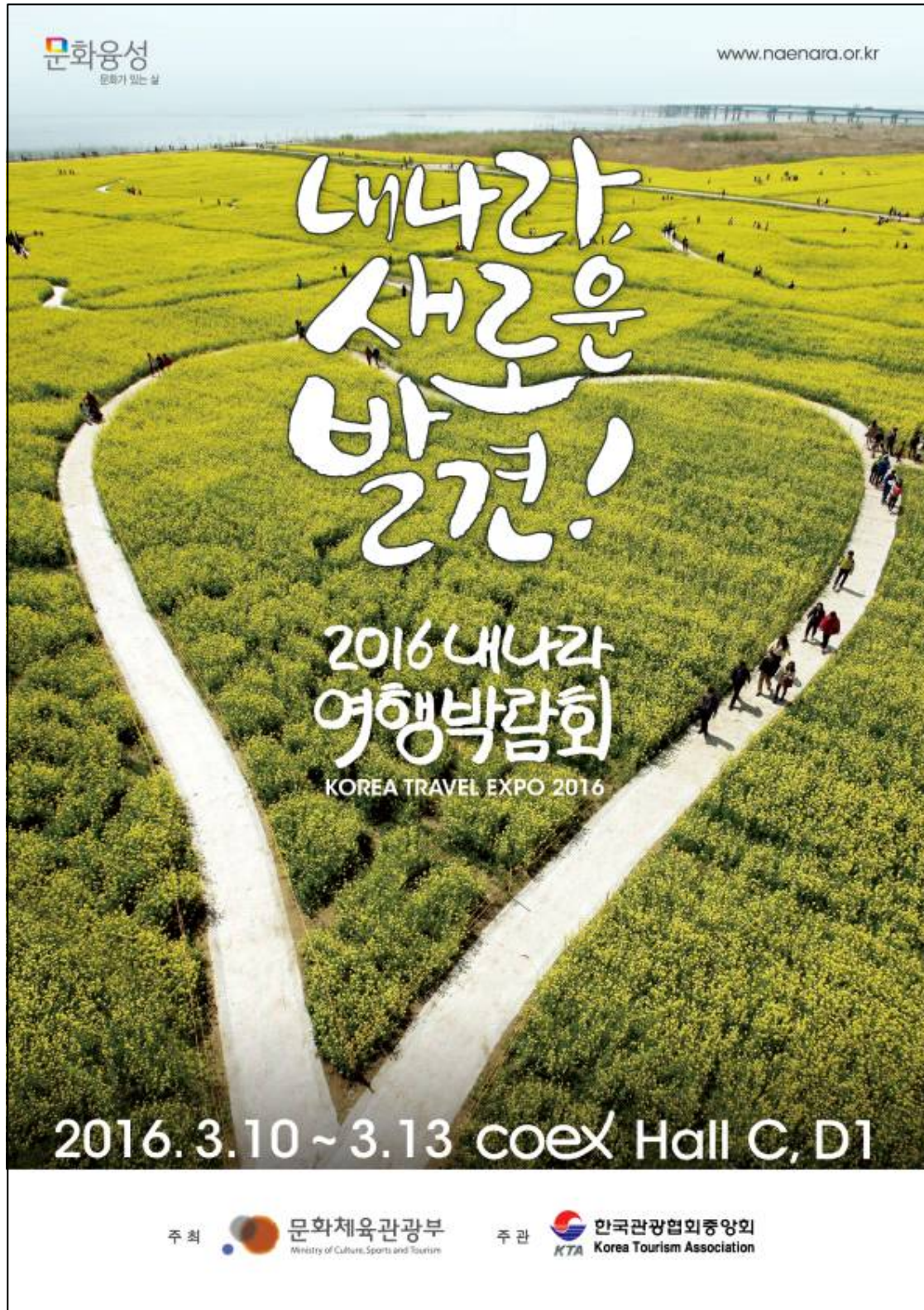
□ 부대 행사

○ 여행무대 행사 일정

시간	3월10일(목)	3월11일(금)	3월12일(토)	3월13일(일)
10:00-10:30				
10:30-11:00			[공연] 홍캠프 '음악 힐링캠프'	
11:00-11:30	[공연] 홍캠프 '음악 힐링캠프'		[공연] 전통실내악 (전북전통문화연구소)	[공연] 홍캠프 '음악 힐링캠프'
11:30-12:00				
12:00-12:30	[의상쇼] 뉴시니어라이프 패션페스티벌			
12:30-13:00				[강연] 스마트폰으로 여행사진 인물사진 잘 찍기(이종원)
13:00-13:30			[공연] 안성 남사당 바우덕이 풍물단	
13:30-14:00		[강연] 걷기에 자유가 있다. (진우석)	[강연] 맛있는 봄 여행(양영훈)	원주다이나믹 댄싱카니발
14:00-14:30				
14:30-15:00				
15:00-15:30	[공연] 홍캠프 '음악 힐링캠프'		[공연] 전통실내악 (전북전통문화연구소)	
15:30-16:00	[강연] 전국일주, 향기로운 술기행 (허시명)	[공연] 전통과 사람들 문화유산에 관광을 더하다.	[공연] 홍캠프 '음악 힐링캠프'	
16:00-16:30			[토크콘서트] 늘 여행하는 일상을 살아가는 방법 (익스퍼루트)	
16:30-17:00				
17:00-17:30				
17:30-18:00				

○ 기타 부대행사

구분	3월10일(목)	3월11일(금)	3월12일(토)	3월13일(일)
11:00	문화답사여행지 베스트 7 (송일봉)	주말여행 컨설팅 (이민학)	남녘의 봄꽃 여행지 (이종원)	길 위의 예술, 여행 드로잉 (김현길)
13:00	산에는 꽃 피네, 들에도 꽃 피네 (진우석)	한라산도 식후경 (채지형)	캠핑, 여행을 통해 세상과 만나다. (김홍수)	오늘부터 여행작가 (채지형)
			[공연] 안성 남사당 바우덕이 풍물단 남사당 놀이	[공연] 김영아 전통예술단
14:30	사찰여행 100배 즐기기 (유철상)	남도의 가고 싶은 섬 (박재완)	나홀로 여행 시작하기 (이주영)	맛이 있는 농촌여행 (김수남)
16:00	기차여행 100배 즐기기 (권다현)	힐링여행의 기술 (임운석)	눈부신 봄날 사진 찍기 좋은 여행지 (양영훈)	



친환경농산물 시장 2020년까지 2.5조원으로 확대 ['15: 1.4조원

《 주 요 내 용 》

- ◇ **[비전 및 전략]** 국민적 신뢰에 기반한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 육성을 비전으로, △인증제도 개선, △유통체계 확충 및 소비 확대, △생산기반 확충, △유기농업자재의 안정적 공급, △농업환경 보전 강화 등 5대 분야 21개 추진과제로 구성
- ◇ **[목표]** 생산-가공-유통-소비단계의 선순환 체계 구축을 통한 친환경농산물 시장 규모·재배면적 확대 및 소비자 신뢰 제고
 - 친환경농산물 시장 규모 : ('15) 1.4조원 → ('20) 2.5(77% 확대)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이하 농식품부)는 3월 10일 국민적 신뢰에 기반한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식품산업 육성을 위한 「제4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2016~2020)*」을 발표하였다.

* 친환경농어업법(약칭) 제7조에 의거, 매 5년마다 중장기계획 수립('01~)

- 이번 계획에는 기존의 1차산업(생산) 중심의 친환경농업을 넘어서, 탄탄한 생산기반을 바탕으로 가공·외식, 유통·수출 등 적극적 수요 창출을 통해 친환경농업의 외연 확장과 새로운 부가가치 토대를 마련하고,
- 환경친화적인 농업자원 관리 모델 확산을 통해 우리의 농업환경을 건강하게 하는 전략을 담고 있다.

□ 그간 친환경농산물은 웰빙 열풍, 소득수준 향상 등으로 소비자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대되고, 농업인의 적극적 참여와 정책적 지원 등에 힘입어 짧은 기간 동안 우리 농업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해 왔다.

* 친환경농산물(무농약이상) 재배면적 비율 : ('01) 1.7천ha(0.1%) → ('15) 75(4.5%)

* 친환경농산물 인증 농가 : ('01) 2,087호 → ('15) 60,018

- 다만, 취약한 생산기반, 부실인증에 대한 소비자 신뢰 저하 및 점검 강화에 따른 인증

취소 등으로 '12년 이후에 재배면적 및 농가수가 감소*하고 있다.

* 무농약이상 재배면적 비율 : ('12) 127천ha(7.3%) → ('13) 119(7.0) → ('15) 75(4.5)

- 정부는 부실인증 방지를 위한 견고한 소비자 신뢰제도 정책을 기반으로 가공·외식·수출 등 타 산업과의 연계를 통해 친환경농산물 수요가 생산을 견인할 수 있는 선순환 체계 구축을 통해 친환경 농식품산업을 적극 육성할 예정이다.

* 친환경농식품 판매장/매출액 : ('10) 4,102개소/7,795억원 → ('15) 5,228/14,367

〈 친환경농식품산업의 선순환 체계도 〉



- 이번 계획은 국민적 신뢰에 기반한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 육성을 비전으로, △인증제도 개선, △유통체계 확충 및 소비 확대, △생산기반 확충, △유기농업자재의 안정적 공급, △농업환경 보전 강화 등 5대 분야 21개 과제로 구성되었다.

- 정부는 2020년까지 친환경농산물(무농약이상)의 재배면적 비율을 현재 4.5%(75천ha)에서 8%(133천ha)로 약 78% 확대하고, 국내외적으로 지속 성장하고 있는 친환경농산물 시장 규모는 현재 1.4조원에서 2.5조원으로 77%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또한, 친환경인증의 부적합률을 현재 4.6%에서 1%까지 낮춤으로써 소비자 신뢰를 회복하고, 연차별 화학비료·농약의 사용량*을 매년 1.5% 이상 감축하여 농업환경 보전에 앞장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 화학자재 사용량 : ('14) 농약 9.3kg/ha / 화학비료 258 → ('20) 8.5 / 235

- 「제4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2016~2020)」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인증제도 개선을 통한 소비자 신뢰 제고

- 현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민간인증기관의 이원화된 인증 체계는 2017년부터 **민간인증기관으로 완전 이양하여 일원화**하고, 민간인증기관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등급제를 도입('16)**하고, **규모화·전문화를 위한 관리제도를 재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 * 인증심사원 자격요건 강화 및 최소 인력 상향(5명), 우수인증기관 통폐합 시 행정처분 감면 등
- 또한, 국내여건 및 국제기준(IFOAM, CODEX)을 고려하여 무농약인증 전환기간(1년) 제한 등 **과도한 인증기준은 합리화**하되, **인증 농식품의 사후 관리는 강화*시켜** 나갈 계획이다.
 - * 상습위반자에 대한 인증신청 제한기간 연장하여(1년→2) 재진입 차단, 인증기준 위반시 회수·폐기 및 미이행자 처벌규정 마련, 명예감시원 제도 도입 등
- 가축용 사료에 한정된 비식용유기가공품 인증제도를 확대하여 2016년에는 **소비자 수요가 높은 반려동물 사료 인증제 도입을 우선 추진**하고,
- **세제·섬유** 등 타부처 소관 비식용유기가공품에 대해서는 사례조사·관계기관의 의견수렴·소비자 조사 등을 거쳐 **표시기준을 연차적으로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 광역단위 산지유통조직 육성(9개소) 및 소비채널 다양화

- 친환경농산물 소비시장 변화*에 대응한 **산지유통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생산자단체 중심의 '**광역 친환경농산물 전문유통조직**'을 설립해 나갈 계획이다.('17 : 1개소 → '20 : 9)
 - * 현재 소규모 분산 추진되고 있는 친환경농산물의 특성상, 규모화를 통한 품목 다양성, 공급의 안정성, 품질 균일화 등 소비지 요구사항 충족 애로
- 또한, 생협 및 전문유통업체 등 **기존 소비지 유통체계를 확대**하고, **온라인(홈쇼핑)·직거래*.로컬푸드** 등 친환경농산물의 **신규시장 개척**과 **기업과의 상생협력 확산** 등을 통해,
 - * 생산자-소비자 교류 활동을 확대하기 위한 **친환경농산물꾸러미사업(CSA) 확산**(회원수, '15: 4백명 → '20: 300)
- **2020년까지 친환경농식품 판매장은 현재 5,228개소에서 6,916개소까지 32% 증대**하고, **매출액은 현재 1.4조원에서 2.4조원까지 71% 늘려나갈** 계획이다.
- 그리고, 그간 1차 농산물 생산에 집중하던 정책의 추진 체계를 **친환경가공식품의 산업 기반 확충**과 동시에, **외식·수출 등 국내외 소비시장을 확대**할 예정이다.
- 이를 위해 **무농약농산물 사용 가공식품 인증·표시기준을 마련**하고('16), **가공업체의 컨설팅**

탕·R&D·맞춤형 원료 정보 및 인센티브 사업* 등을 통해 **가공-외식-수출-관광 등과 연계한 품목별 성공사례를 매년 10개씩 발굴**하여 확산해 갈 예정이다.

* 지원협의체 구성, 가공시설, 마케팅, 교육 등 친환경농산물의 6차산업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지원(친환경농산물기반구축사업)

- 마지막으로,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을 도입**하여('16), **친환경농업의 가치에 대해 적극 홍보**함으로써, **자생적 소비촉진 기반**을 마련하고, 기술교육·조사연구·판로 확충 등을 체계적으로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 **생산기반 확충 및 유기농업자재의 안정적 공급**

- 기존 친환경 생산단지(48개소)·지구(1,159개소)에 **가공·판매·체험 등을 연계한 6차산업화**를 통해 **친환경농산물의 생산 및 그에 따른 부가가치 창출**을 적극 유도해 나갈 예정이다.

* (현행) 생산·친환경자재·유통시설 위주 → (개선) 가공·산지직판장·체험시설 등 추가

- 친환경농업 실천에 따른 농가 소득감소 및 경영비 증가분에 대한 적절한 보전 등을 위해 **직불금 지급단가 차등화(논, 밭 → 논·밭·과수)** 및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예산 당국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 또한, 생산자·연구기관 등이 참여하는 '**친환경농업 실용화 연구단(가칭)**'을 구성('16)하여 2018년까지 **한국형 친환경 생산모델(10개 품목)**을 **개발***하고, 보급·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 선진농가 성공사례 분석 → 품목별(벼, 사과, 배, 고추 등 10개 품목) 생산모델 및 표준 재배기술 매뉴얼, 토양관리모델 등 개발

- 친환경농산물 재배에 사용되는 허용물질(90종)의 **전면 안전성 재검증**을 실시하고, **허용물질 일몰제를 도입('16)**하여 주기적(5년)으로 환경·인체 위해성 등의 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다.

* (현행) 필요시 허용물질 전문가심의회 개최 → (개선) 연간 15~20종의 허용물질 검증을 통해 현행 허용물질(90종) 전면 재검증(연 2회 정기·의무화)

- 또한, 농관원과 농진청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유기농업자재 관리체계를 통합**하여 관리를 강화한다.

◇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 마련 및 조사시스템 구축**

- 농업활동으로 인한 토양·수질 등 농업환경 보존 기능을 강화하고, 이를 현장에 적용하기 위한 **한국형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 모델**을 2020년까지 5개소 육성해 나갈 계

획이다.

* 기본방향 수립('16) → 시범사업 실시('17~'19) → 모델화 작업 및 확산('20)

- 국내에 적용 가능한 농업환경 보전사항을 구체화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친환경농업단지·지구의 프로그램으로 유도하며, 향후 친환경 농가들의 의무 이행사항으로** 개편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 또한, 여러 기관에서 분산 추진중*에 있는 **농업환경조사 통합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정책효과와 연계시킬 수 있도록 **농업환경 조사시스템을 개선·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 일반 농경지(논, 밭, 과수, 시설재배지)의 토양조사: 농촌진흥청 / 하천 및 지하수의 수질조사: 농어촌공사, 환경부 / 가축분뇨: 축산환경관리원 등

* 토양화학적 조사: (현행) 4년 1주기(밭→과수원→논→시설) 2천점 내외 조사 → (개선) 매년 대표필지 중심 15만점 조사(전체 필지의 1%)

- 농식품부는 이번 4차 계획을 통한 친환경 농식품산업 육성을 위해 **2016년 총 6,226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2020년까지 연차별로 투입규모를 **평균 3.7%씩 늘려나갈** 계획이다.

* 실제 투융자 규모는 국가 재정운용계획 수립 시 재정운용 당국과 협의하여 반영 예정

- 분야별로 광역단위 산지유통조직 육성, 친환경가공산업 활성화 등 유통·소비채널 확충과 농림업의 환경보전기능등을 강화하는데 투자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 농식품부 남태헌 창조농식품정책관은 “이번 4차 계획 수립을 통해 친환경 농식품산업이 **한.중 FTA 등 본격화되는 시장개방에 대응하여 고품질·안전 프리미엄 상품(premium commodity)**으로서, 향후 우리 농산물의 **고부가가치화와 농식품 수출시장 개척의 중요한 토대**가 마련될 것”이며,

- “또한, 친환경농산물 생산과 가공, 외식, 유통, 수출, 관광이 서로 연계된 **지역단위 친환경농산물 6차산업화 성공사례**를 통해 농촌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 농식품부는 5대 분야 세부과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정부·지자체·생산자·소비자(단체)·업계·연구기관** 등이 참석하는 **분야별 작업반(Working Group)**을 4월중으로 구성하여 구체적인 세부 실천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분야별 추진전략 >

		현행	개선
친환경 인증 농식품	인증제도	○안전성에 대한 고려 미흡 ○이원화된(농관원·민간인증기관) 인증체계 ○과도한 서류요건, 국내 여건에 맞지 않는 인증기준	○안전성 제고 및 사후관리 강화 ○민간인증체계 확립 및 민간인증기관 등급제 도입 ○인증관리는 강화하되, 과도한 인증기준은 합리적 개편
	유통소비	○지역분산 소규모 유통구조 ○생협·전문점 중심 판매구조 ○친환경농업에 대한 가치홍보 미흡 ○1차 농산물 판매 중심	○광역(道)단위 산지조직화 ○일반소매점·온라인·기업 상생협력 등 판매채널 다양화 ○의무자조금 활용, 자생적 소비촉진 기반 마련 ○가공외식 등 연관산업 육성(무농약 가공품, 비식용, 음식점 등)
	생산	○단자 지구 내실화 미흡(30%) ○높은 생산비용으로 친환경 지속 실천에 어려움 ○선도농가 중심의 폐쇄적 생산구조	○단자 지구 내실화(인증면적 70%) -가공·체험 등 6차산업화 유도 ○검사비용 절감, 직불제 개편* 등을 통한 소득보전 지원 * 저농약의 무농약 이상 유도 ○한국형 친환경 생산모델 개발, 교육 및 기술보급 확산
	자재	○이원화된(공시·품질인증) 자재관리 시스템 ○허용물질 평가시스템 미구축 ○보편화된 처리종자 사용	○자재관리시스템 통합 및 사후관리 강화 ○허용물질 검증·평가시스템 구축 및 선정기준 강화 ○유기종자 공급체계 구축
농업환경보전		○우리 농업여건에 맞는 환경보전형 영농방식 미구축 ○농업환경 변화상 확인이 어려운 조사시스템	○한국형 농업환경보전모델 정립·확산(시범사업) ○지역단위 평가가 가능토록 지표 및 조사주가·지점 확대

비전	국민적 신뢰에 기반한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		
목표	◇ 인증제도 개선 및 생산-가공-유통-소비단계의 선순환 체계 구축을 통한 친환경농식품 산업 육성 ○ 친환경인증 재배면적 비율 : ('15) 4.5% → ('20) 8 ○ 인증 부적합률 : ('15) 4.6% → ('20) 1 ○ 친환경농산물 시장 규모 : ('15) 1.4조원 → ('20) 2.5 ◇ 농림업의 환경보전 기능 강화 ○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 도입 : ('16~'19) 시범사업, 모델 정립 → ('20이후) 확산 ○ 화학자재 사용량 : ('14) 화학농약 9.3kg/ha/화학비료 258 → ('20) 8.5/235		
추진 과제 및 주요 내용	친환경 인증 농식품 산업 육성	① 인증제도 개선	• 민간 인증체계 확립 / 역량 강화 • 인증 농식품 안전관리 강화 • 국내여건 고려한 인증기준 재정비 • 비식용 유기가공품 제도 마련
		② 유통체계 확립 및 소비확대	• 생산자단체를 통한 유통계열화 • 소비자 판매채널 다양화 • 소비촉진 및 소비자 인식 제고 (의무자조금 활성화) • 가공·외식·수출산업 활성화 • 유통정보 제공 강화
		③ 생산기반 확충	• 생산단지·지구 내실화 • 경영비 절감 영농시스템 구축 • 친환경농업 직불제 개선 • 농가 교육 및 기술 지원
		④ 유기 농업자재의 안정적 공급	• 허용물질 및 자재 관리제도 정비 • 유기자재 지원사업 개선 • 유기종자 공급시스템 구축
	농업환경 보전 강화	⑤ 농림업의 환경보전 기능 강화	•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 마련 • 적정시비 및 방제시스템 구축 • 가축분뇨 자원화 및 악취관리 강화 • 산림의 환경보전기능 제고
		⑥ 농업환경조사 시스템 구축	• 농업환경조사 시스템 구축

가 인증제도 개선

◇ 불필요한 규제 정비로 유기·무농약 인증 진입 편의성 제고 및 사전·사후관리 강화를 통한 소비자 신뢰 제고*

* 인증 부적합률 : ('15) 4.6% → ('20) 1(연간 25% 감소)

◇ 농관원의 인증업무 민간 완전 이양, 민간인증기관 등급제 도입 및 관리체계 정비를 통한 역량 강화

◇ 반려동물 사료, 세제, 섬유 등 비식용유기가공품 인증제 도입 및 표시기준 마련

□ (인증제도 정비) 국내여건 및 국제기준(IFOAM, CODEX)을 고려하여 과도한 인증기준 합리화* 및 인증 농식품 사후 관리 강화**

* 무농약 인증을 위한 전환기간(1년) 제한, 무농약 인증 신규 신청 이전 1년간 영농일지 제출 등 규제 조항 폐지

** 상습위반자에 대한 인증신청 제한기간 연장하여(1년→2) 재진입 차단, 인증기준 위반시 회수·폐기 및 미이행자 처벌규정 마련, 명예감시원 제도 도입 등

○ 유기·무항생제 축산물의 항생제 등 동물용의약품 사용기준은 국제기준(미국 NOP 등)에 부합*하도록 강화

* (현행) 휴약기간 2배 준수 → (강화) 가축 전(췌)생애 동물용의약품 사용 금지

□ (민간인증체계 확립) 농관원 인증업무의 민간 완전 이양 및 민간인증기관 등급제 도입('16)·관리체계 정비*를 통한 역량 강화

* 인증심사원 자격요건 강화 및 최소 인력 상향(5명), 우수인증기관 통폐합 시 행정 처분 감면 등

○ 농관원은 민간인증기관의 사후관리를 집중 추진*하여 인증기관의 신뢰 제고

* 인증기관 지도·점검 횟수(연 1회 → 2회 이상) / 생산단계 민간인증기관 소속 농가 조사 확대('15: 20% → '20: 40)

□ (비식용유기가공품 관리제도 마련) 가축용 사료에 한정된 비식용유기가공품 인증제도를 확대하여 반려동물 사료 인증제 도입('16년)

○ 세제·섬유 등 타부처 소관 비식용유기가공품의 표시기준 마련

사례① : 민간인증기관 주도의 비식용유기가공품 관리제도 운영

- Bio-Inspecta(스위스), Ecocert(프랑스) 등 민간인증기관은 유기식품 이외에 국가인증제도가 없는 비식용유기가공품에 대한 자체기준을 마련하여 운영
- 주요 품목은 섬유(잠옷, 양복, 속옷 등), 세제, 화장품, 임산물(장난감, 침대, 의자 등) 등이며, 각 인증기관은 자체 인증·표시기준을 마련하여 운영

나 유통체계 확충 및 소비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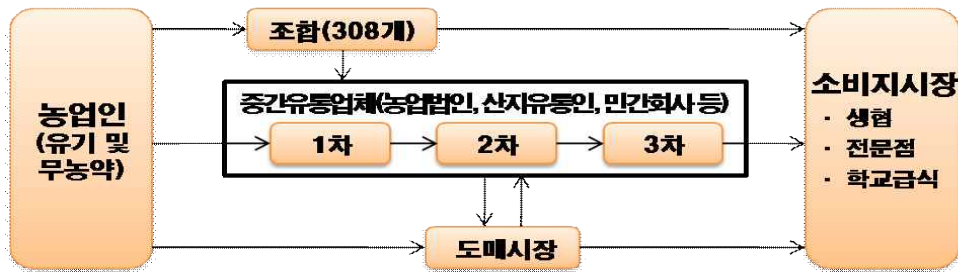
- ◇ 광역 친환경농산물 전문유통조직 설립('17 : 1개소 → '20 : 9)
- ◇ 기존 소비지 유통 지원체계 확대 및 온라인(홈쇼핑)·직거래·로컬푸드 등 신규 소비시장 개척* 추진
 - * 친환경농식품 판매장 : ('15) 5,228개소 → ('20) 6,916 (32% 증대)
 - * 친환경농식품 매출액 : ('15) 14,367억원 → ('20) 23,574 (64% 증대)
- ◇ 무농약농산물 가공식품 인증·표시기준 마련('16) 및 가공-외식-수출-관광 등과의 연계를 통한 품목별 우수사례 매년 10개 발굴·확산
- ◇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 도입('16), 체계적인 소비촉진 홍보

- (산지 유통조직 활성화) 소비지와 직접 교섭할 수 있는 '광역 친환경농산물 전문유통조직' 설립('17 : 1개소 → '20 : 9)
 - 조합의 친환경농산물 '공선출하회' 구성을 확대('14: 34개소 → '20: 100)하여 산지 조직 육성
 - 일정규모 이상의 물량을 취급할 수 있는 생산자단체 중심*의 산지 유통조직* 확대
 - * (예시) 지역단위 친환경단체가 도단위로 회원(2~3천명, 취급액 500억원 이상 등)을 모아 판매 전문 협동조합 설립

사례② : 생산자단체 중심의 산지유통조직 활성화

-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충남경제사업단은 2012년부터 시·군별 품목조직회를 연계하여 조합원 554명을 중심으로 학교급식, 생협, 일반소매점(롯데슈퍼 등)을 대상으로 경제사업 수행, 연평균 20억원 이상 매출 달성('15)

(현행) 다단계의 중간유통업체를 통해 소비지에 공급



(개선) 생산자단체 중심의 유통 및 가공·외식업체 연계



□ (판매 채널의 다양화) 생협·전문점 등 기존 소비지 유통 지원체계 확대 및 신규시장 개척

- 온라인(홈쇼핑)·직거래·로컬푸드 등 신규시장 개척 및 기업과의 상생협력 확산으로 친환경농식품 시장규모 확대*

* 친환경농산물 판매장 : ('15) 5,228개소 → ('20) 6,916

* 친환경농산물 매출액 : ('15) 14,367억원 → ('20) 23,574

사례③ : 농식품부-롯데슈퍼-친농연 유기농 상생협력 MOU 체결('15.5월) 결과

- 롯데슈퍼 유기농 판매 점포('15.3월 : 30개소 → 12월 : 200) 및 취급 품목 ('15.3월 : 47개 → 12월 : 103) 확대를 통해 소비자의 구매 접근성 확대
- 친농연에서는 롯데슈퍼에 월평균 214백만원 상당의 유기농축산물을 공급함으로써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

사례④ : 흥성축협 하나로마트 운영사례

- 지역 친환경농산물(쌈채, 버섯 등) 계약재배(흥성유기농영농조합법인)를 통해 3개 매대(賣臺)*만으로 평균 100만원/일 이상 매출 유지
 - * 냉장케이스(180×250cm, 1대), 일반 매대(320×160cm, 2개)
- 농가조직화(품목 다양화, 물량의 안정성), 흥성축협의 사업 의지(마진율 10~15%, 지역산 농산물 결품시에만 타지역 농산물 매입 등)가 성공 요인

- 생산자-소비자 교류 활동을 확대하기 위한 친환경농산물프리미사업(CSA)* 확산(회원수,

‘15: 4백명 → ‘20: 300)

* CSA(Community-Supported Agriculture) : 소비자조직이 농가경영비를 선지불하고 수확기에 농산물을 현물로 제공받는 새로운 유형의 농산물 직거래 방식

○ 합리적 소비를 위한 **가격 및 주요 통계 정보를 강화**하여 소비자 신뢰 지속적으로 확보

□ (식품산업과의 연계 강화) 친환경가공식품의 산업기반 확충 및 외식·수출 등 국내외 소비 시장 확대를 위한 생태계 조성

○ 무농약농산물 사용 가공식품 표시·인증기준 마련(‘16)*으로 소비자의 다양한 요구 충족 및 친환경농산물 수요 지속 창출

* 현재, 유기가공식품 표시·인증기준만 마련, 무농약 가공식품 관리기준 부재

○ 친환경 가공·외식·수출산업 활성화를 위한 **발전 협의체 구축(‘16.상)** 및 컨설팅·R&D·원료 정보 등 맞춤형 지원

○ 유기가공식품 동등성 협정 체결국(미국, EU) 및 중국·일본 등 수출 유망국의 시장·통관 정보제공 강화 및 관련 비용 지원*

* 해외 유기식품 인증비용(2천만원 내외), 샘플통관 운송비(월 1백만원), 박람회 지원 등

○ 친환경농산물(생산)의 가공·외식·유통·수출·체험 등과의 연계를 통한 품목별 6차산업화 성공사례 매년 10개씩 발굴·확산

사례⑤ : 친환경농산물 외식·가공·수출 분야 정책 수요

○ (학사농장) ‘15년 유기농분식점 설립 이후 500개점 개점 목표, 500개 매장 에서 김밥 판매시(500개 판매기준) 쌀 6,400톤 등 유기농산물 추가 수요 발생

☞ 유기농산물 외식 분야 **컨설팅** 지원, 모태펀드 등 **투자 알선**, **원료구매 자금 저리 지원** 등에 대한 정부지원 필요

○ (주식회사 담채원) 유기농 김치 생산 업체로 유기가공식품·HACCP 인증 (‘08년), 소비계층별 마케팅 전략* 등을 통해 매출액**은 지속 증가

* (예) 학교급식용 깍두기는 ‘별’ 또는 ‘하트’ 모양으로 공급 ** (‘13) 795백만원 (10개 품목) → (‘14) 1,018(14) → (‘15) 1,455(18) → (‘16p) 20억원 매출

☞ 유기식품의 **인식부족** 등에 따른 **낮은 공급단가**, 시장확대에 대응한 시설 개선이 시급함에 따라 체계적 **홍보와 시설분야 지원** 필요

○ (주식회사 장원) 설록다원을 통해 ‘15년 유기녹차 51톤 수출(‘10년 0.5톤), ‘16년에는 차(茶) 전문점 티바나(스타벅스)와 유기녹차 13톤 공급계약 체결

☞ 수출 성공요인은 지속적인 **해외 박람회 참가**(제품전시, 바이어 상담 등), **바이어 초청 행사**, 품질개선 노력 등에 있으며, 동 분야의 정책관심이 필요

□ (의무자조금 도입)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 도입(‘16)을 통한 자생적 소비촉진 기반 마련 및 기술교육·조사연구 등 체계적 진흥

다 생산기반 확충

- ◇ 친환경생산단지·지구의 가공·판매·체험 등을 연계한 6차산업화를 통해 실질적 성과 창출 유도
- ◇ 친환경농업 직불금 지원대상 및 금액 확대 등 개선 검토
- ◇ 한국형 친환경 생산모델 개발 및 농가 보급체계 구축 강화*
 - * '18년까지 10개 주요 품목 유기·무농약 생산모델 개발·보급

- (생산단지·지구 내실화) 친환경 생산단지·지구의 실질적 성과 창출을 위해 생산기반 구축 외 가공·판매·체험 등과의 연계* 강화

* (현행) 생산·친환경자재·유통시설 위주 → (개선) 가공·산지직판장·체험시설 등 추가

사례⑥ : 우리영농조합법인(전북 군산) 6차산업화 성공사례

- '03년 친환경 쌀 생산농가 중심(144명)으로 영농조합법인을 설립(415백만원) 하였으며, '09년까지 주유소 운영과 학교급식용 쌀 공급사업에 집중
- 이후, 직매장 운영, 친환경 학교급식, 친환경 농촌체험*등 생산-유통-체험의 연계를 통해 매출액('12.7~'13.6월 : 14억원 → '15 : 42)은 급격히 증가
 - * 농촌체험교육장, 요리체험장 완공 예정('16.7월 예정)

- 기존 단지·지구의 인센티브 사업을 교육·컨설팅·마케팅 등 S/W까지 확대*하여 사업 내실화

* (현행) 광역단지 한정(20억원) → (개선) 단지(20억원 범위), 지구(10억원 범위)

- (친환경농업 직불금) 친환경농가 소득감소분 지원을 위한 직불금 지급 상한면적 확대*, 직불금 지급단가 차등화** 및 상향 방안 검토

* (현행) 5ha → (개선) 개인 30, 법인 50(논: 개인 30, 법인 50 / 밭: 개인 5, 법인 10)

** (현행) 논·밭 → (개선) 논·밭·과수

- 저농약 농가의 무농약 이상 전환을 유도하기 위한 직불금 추가 지급 검토

- 친환경농업의 환경보전효과 검증을 통해 직불금 지급기한 제한 폐지* 추진

* 유기에 한정하여 적용하되, 무농약은 현행 지급기한(3년) 연장 방안 검토

- (농가교육기술 지원) 생산자·연구기관 등이 참여하는 '친환경농업 실용화 연구단(가칭)'을 구성하여 ('16) 한국형 친환경 생산모델(10개 품목 개발)*('18)

* 선진농가 성공사례 분석 → 품목별(벼, 사과, 배, 고추 등 10개 품목) 생산모델 및 표준 재배기술 지도서, 토양관리모델 등 개발

라 유기농업자재의 안정적 공급

◇ 허용물질 선정절차 강화 및 안전성·필요성 재검증 추진*

* 연간 15~20종의 허용물질 검증을 통해 현행 허용물질(90종) 전면 재검증('17~'21년)

◇ 농관원과 농진청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유기농업자재 관리체계 통합을 통한 관리 강화

◇ 유기농업자재 공동구매 등 공급방식 전환을 통한 농가부담 절감

□ (허용물질의 안전성 검증) 연간 15~20종의 허용물질 검증을 통해 현행 허용물질(90종)의 전면 안전성 재검증 실시

* (현행) 필요시 허용물질 전문가심의회 개최 → (개선) 연 2회 정기·의무화

○ 허용물질 일몰제를 도입('16)하여 주기적(5년)으로 환경·인체 위해성 등의 점검 강화

□ (유기농업자재 관리 강화) 농진청·농관원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자재 관리체계를 농관원으로 일원화('16)

○ 공시제품*의 효능·효과를 표시토록 하여 농업인의 알권리 확보 및 우수제품으로의 전환 유도

* 공시제도는 사용가능만을 표시하고, 효능·효과는 보증하지 않아 농업인 불만 제기

○ 유기농업자재의 공급·유통체계 개선을 위해 생산자단체 중심으로 공동구매 체계* 구축

* '16년 충남지역을 대상으로 시범사업 추진 후, 전국으로 확대 예정

마 농업환경 보전 강화

◇ 농업활동으로 인한 환경보전 기능 제고를 위해 우리 실정에 맞는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 마련('20년까지 5개소 시범사업 실시)

◇ 농업환경조사 시스템 개선 및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해 농업환경 변화상 파악 및 정책효과 환류

□ (농업환경보전 강화) 토양·수질 등 농업환경 보존 기능 강화 및 이를 위한 한국형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 모델 육성(2020년까지 5개소)

* 기본방향 수립('16) → 시범사업 실시('17~'19) → 모델화 작업 및 확산('20)

사례⑦ : 새만금유역 농업비점관리 거버넌스 구축 시범사업

- ◇ (사업목적) 새만금유역 간척지 지역의 농업환경 개선
- ◇ (사업규모) 전북 부안군 324ha
- ◇ (사업기간·사업비) '15~'16년, 1,800백만원
- ◇ (사업내용) 농업 배출저감기술(BMP) 개발·보급, 농업인·지역주민 역량강화 교육 등
- ◇ (사업성과) 배출저감기술(BMP)을 활용한 농법 적용 시 질소·인 배출 감소

- 국내에 적용 가능한 농업환경 보전사항 구체화 및 중장기적으로 친환경 농가들의 의무 이행사항으로 개편 검토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 모델 예시(안)

- (토양개선) 토양 비옥도 개선 및 토양유실 방지를 위한 재배유형
 - (토양 비옥도) 지역의 기후와 토양에 맞는 작물과 품종을 선택하여 윤작, 혼작·간작하고, 녹비작물인 화본과·두과작물을 재배하여 농지에 환원
 - (토양유실 방지) 작물이 자랄 만한 곳만 제한적 또는 필요한 정도로 경운을 최소화하여 노동력과 기계적 에너지를 감소시키거나 무경운 방식으로 재배
 - (재배관리) 적정비료 및 방제시스템 구축 유형
 - 시비처방에 따라 화학비료보다는 토양개량제, 퇴·액비의 사용을 우선하되, 가축분뇨를 이용한 퇴·액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비료공정규격'에서 정한 규격에 적합하게 제조된 것을 사용, 적정량 시비(토양환경조사 지표와 연계)
 - (가축분뇨 자원화) 지역별 축산 분뇨와 농경지의 양분 투입 균형 관리
 - 지역단위 양분수지 관리대상 물질을 질소와 인산 등으로 지정하고, 가축분뇨, 유기자재 공급 등 균형 관리
 - (기타) 농업활동 부산물(폐자재, 농약병 등) 관리, 생태둑병 조성, 용배수로·농로 등 농업기반시설 공동관리, 휴경지 보전 관리 등
- (농업환경조사 체계 구축) 전체적인 농업환경 변화상 파악 및 정책효과 환류를 위한 농업환경 조사시스템 개선·보완*
- * 토양화학성 조사: (현행) 4년 1주기(밭→과수원→논→시설) 2천점 내외 조사 → (개선) 매년 대표필지 중심 15만점 조사(전체 필지의 1%)
 - ** 특정 친환경농업 단지·지구를 선정, 토양 화학성·물리성·생물다양성 등을 조사분석 실시
- 여러 기관에서 분산 추진*중인 농업환경조사의 통합관리체계 구축을 통해 전국적인 농업환경 변화상 점검·관리 강화

對할랄시장 수출확대를 위한 간담회 및 UAE할랄인증서 전달식 개최
- 할랄식품 수출기업·유관기관별 할랄대책 점검 및 UAE할랄인증서 전달 -

《 주 요 내 용 》

◇ 對할랄시장 수출확대를 위한 할랄식품 수출기업·유관기관
 간담회 및 UAE할랄인증서 전달식 개최

○ 일시 및 장소 : 2016. 3. 10(목) 13:30~16:00, 농식품부 회의실

○ 참 석 : 농식품부, 서울우유, 풍기인삼농협, 대상FNF, DK식품,
 대상, 진주원예협동조합, 농심, 아워홈, aT, 농협중앙회, 한식연,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이슬람교중앙회(KMF) 등 약 25명

* 음영처리된 업체는 UAE할랄인증서 획득업체(6개)

○ 주요 내용 : 할랄 식품 수출기업(8개) 및 유관기관(6개) 할랄식품
 분야 추진 실적·계획 등 점검, UAE할랄인증 취득 업체(6개 국내
 식품 기업) UAE할랄인증서 전달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이하 농식품부)는 對할랄시장 수출확대를
 위한 할랄식품 수출업체 및 유관기관 간담회를 3. 10일(목) 오
 후 농식품부에서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 간담회에는 서울우유, 풍기인삼농협, 대상FNF, DK식품, 대상,
 진주원예협동조합, 농심, 아워홈 등 8개 국내 할랄식품 수출업체 및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aT), 농협중앙회, 한국식품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한국이슬람교중앙회(KMF), 세종사이버대학교 등 6개 유관기관이 참석하였다.

□ 이번 간담회는 작년 대통령 중동 순방 이후 농식품부를 비롯한 식품 수출 업체 및 관련 기관에서 진행되고 있는 할랄식품분야 추진실적 및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계획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농식품부 수출진흥과장은 “농식품부는 할랄식품 정보 제공, 인증획득 지원 등 할랄식품발전 대책 추진, 할랄식품관련 조직 및 예산 예산 확보, 할랄업무 담당 인력 확보 등을 통해 할랄시장 진출 기반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 이에 식품 업계 및 유관기관은 “할랄식품 산업에 대한 정부의 관심과 지원으로 對할랄시장 수출 확대가 가시화되고 있다”고 하면서 할랄시장은 국내 농식품의 새로운 수요 창출을 위한 블루오션으로 국내·외 할랄인증 획득, 할랄시장 정보 조사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할랄시장으로의 진출을 모색하고 있다고 강조 하였다.

□ 특히, 10여 년 전부터 대만, 베트남 등 아시아권으로만 배를 수출하고 있는 진주원예협동조합은 UAE 할랄인증 획득으로 두바이 K-Food Fair(15.11.26~28)기간 동안 5만불의 배 수출 계약을 체결, 3.1일부터 두바이 18개 스피니즈(대형 식품유통 업체) 매장에서 교민 뿐만 아니라 현지인에게도 인기리에 판매되고 있다고 밝혔다.

○ 또한, UAE에 홍삼제품을 수출하고 있는 풍기인삼농협은 금번

UAE할랄인증서 획득이 UAE에서뿐만 아니라 인근 중동시장에서의 신뢰도·인지도 제고 및 판로 확대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며, 금년 중동 시장 수출액을 전년 대비 50% 증가한 약 30만불로 예상하고 있다.

□ 간담회에 앞서 농식품부와 아랍에미리트(UAE) 표준측량청간 할랄식품 분야 협력을 통해 2월 UAE할랄인증서를 최종 획득한 서울우유, 풍기인삼협동조합, 진주원예협동조합, 대상, 대상FNE, DK식품 등 국내 6개 식품업체에게 식품산업정책실장 주재로 UAE 할랄인증서 전달식을 개최하였다.

○ 금번 할랄인증서를 획득한 식품업체는 지난해 11월 두바이 K-Food Fair(11.26~28)시 할랄인증 심사를 완료하고 UAE 연방 표준측량청(ESMA)으로부터 할랄인증 트로피를 받은바 있다.

○ 농식품부에서도 K-Food Fair 참여 업체 대상 UAE 할랄인증 취득 설명회를 개최하고 할랄인증 취득 희망하는 업체에 대해 한국식품연구원 할랄식품사업단, aT 등과 협업하여 식품업체가 어려워하는 할랄인증 심사절차 및 기준에 대해 컨설팅을 제공하고, 국내 현지실사, 아랍어 라벨링 제작 등 인증 심사 전반에 걸쳐 적극적인 지원을 하였다.

□ 우리 식품기업의 UAE 할랄인증서 획득은 지난해 3월 체결한 한-UAE 할랄식품 협력 MOU 체결 후 양국간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얻은 성과로 국내 최초 UAE 할랄인증서 획득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남다르다.

○ UAE 할랄인증 취득은 UAE와의 협력 및 정부와 기업간 긴밀한 협조를 통해 이루어낸 MOU 후속조치의 대표적인 사례로

평가하고, 금번 UAE 할랄인증 획득을 통해 UAE 등 중동 시장으로 수출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 농식품부 수출진흥과장은 “산업 전반에 걸쳐 수출이 위축되고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서 할랄식품시장이라는 거대 시장으로의 진출은 우리 농식품산업에게 기회임이 분명하며, 금번 간담회와 같은 민·관 소통의 장을 가능한 자주 마련하여 우리 할랄식품 수출 확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언급하였다.

< 참고 >

UAE 할랄인증 획득 기업(6개) 및 품목(26개) 현황

업 체 명	생산지	인증 품목(26)	비 고
서울우유	경기 안산	(10)서울우유(멸균), 서울우유초코릿우유, 초키, 서울우유, 커피우유, 앙팡 바나나맛우유, 앙팡 딸기맛우유, 리이브포도, 리이브사과, 리이브제주감귤	
풍기인삼 협동조합	경북 영주	(5)홍삼농축액, 홍삼분말, 고려홍삼차, 황풍정홍삼액수, 6년근 봉밀홍삼절편	
대상FNF (주)	경남 거창	(4)총각김치, 맛김치, 포기김치, 깍두기	
DK식품 (주)	충남 아산	(4)치즈스틱, 이탈리아 이모스틱, 클래스 치즈스틱, 고구마치즈스틱	
대상(주)	경기 오산	(2)물엿, 쌀엿	
진주원예 농협	경남 진주	(1)배	

국민 배심원단 운영으로 투명한 환경기술 개발 추진

◇ 국민공감형 환경기술 개발을 위해 국민 배심원단 25일까지 모집

◇ 임기 확대로 환경기술개발사업의 전주기적 평가 시행

-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김용주)은 국민의 의견이 반영된 환경기술 개발을 위해 '2016년 환경 기술개발(R&D) 배심원단' 모집을 14일부터 25일까지 진행한다.
- 환경 분야에 관심이 있는 20세(1997년생)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으며,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누리집 (www.keiti.re.kr)을 통해 지원서를 내려받아 담당자 이메일 (survey_rnd@keiti.re.kr)로 신청하면 된다.
- 특히 올해 배심원단은 그간 1년의 짧은 임기로 사업의 전주기 일정 중 일부만 평가한다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 5월부터 2018년 4월까지 2년간 활동한다.
- 모집분야는 환경부에서 추진 중인 글로벌탑 환경기술개발사업, 환경 정책기반 공공기술개발사업 등 13개 환경기술개발 사업이며, 서류 전형 등 심사과정을 거쳐 사업별로 3~5명씩 총 50명 내외를 선발할 예정이다.
- 또한, 사회 복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력단절자를 우선적으로 선발하여 사회 재진출의 기회도 제공한다.
- 배심원단은 환경기술개발 과제의 발굴 단계부터 국민의 입장에서 환경문제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과제의 기획·평가·관리 등 전 과정에 대해 공정성을 심사한다.
- 이 외에도 환경기술개발 성과발표회와 포럼 등에 참석하여 국가

예산으로 개발된 환경기술이 실제 국민의 생활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를 평가한다.

- ☐ 환경산업기술원은 배심원단 운영을 통해 환경기술 개발에 대한 정보를 국민에게 개방하고, 발전 방향에 대해 국민과 지속적으로 소통할 예정이다.
- ☐ 김정주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기술본부장은 “국민 배심원단의 활동을 통해 국민을 위한 투명하고 공정한 환경기술개발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붙임 1. 모집 공고문.

2. 질의응답.

3. 전문용어 설명. 끝.

제4기 환경 R&D 배심원단 모집 공고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는 정부투자 예산의 투명한 운영과 국민이 공감하는 환경 R&D의 추진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제4기 환경 R&D 배심원단을 모집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 모집대상 : 환경 분야에 관심 있는 20세 이상의 일반인

※ 경력단절자(성별 무관) 우선선발

☐ 모집분야

- 환경부에서 추진 중인 “환경기술개발사업” [첨부1] 중 모니터링 참여를 원하는 사업 분야 1순위 ~ 3순위 지정

※ 환경분야(8개분야)별 관심도를 지정하여, 모집분야 배정 및 평가 대상사업 선정 시 참고자료로 활용

☐ 모집인원 : 50명 내외 (사업별 3~5명)

☐ 신청기간 : ~ 16. 3. 25(금)

☐ 신청방법 : [첨부2]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메일(survey_rnd@keiti.re.kr) 제출

☐ 단계별 역할 : R&D 과제 평가에 배심원단으로 참여, 국민 대표로 R&D 발전 방향 제언 및 국민이 필요로 하는 환경기술에 대한 아이디어 제공

☐ 선정통보 : 2016. 4. 4 (월)

☐ 활동기간 : 2016. 5. 1 ~ 2018. 4. 30 (24개월)

☐ 활동(연 5~10회) 수당 : 참석시간에 따라 10~20만원

☐ 문의전화 : 02-380-0354, 0346

1. 환경 R&D 국민배심원단이란?

- 환경R&D 전 과정을 국민에게 개방·공유하고 협업·소통하여 전 국민이 공감하는 환경 R&D를 추진하고자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제도로써, '13년 제 1기 활동을 시작으로 '15년 현재 40명의 제 3기 배심원단(임기 '15. 4. 30까지)이 활동 중입니다.
- 배심원단은 R&D 과제 평가에 참여하여, 국민 대표로 R&D 발전 방향을 제언하고 국민이 필요로 하는 환경기술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 제 1기~3기 배심원단은 어떤 활동을 하였나요?

- 2014년 12개 사업 289개 과제, 2015년 14개 사업 245개 과제 ('16년 2월 29일 현재기준)의 주요평가 모니터링에 참여 중에 있습니다.
- 특히, 2015년에는 환경부, 기술원, 연구자와 함께 환경기술R&D 성과발표회 및 '국민공감포럼('15.10.21)'에 참여하여 국민대표로서 환경기술발전방향에 대한 의견 제시 등의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3. 정부에서 추진 중인 13개 환경기술개발사업은 무엇인가요?

사업명	추진목표
글로벌탑 환경기술개발사업	세계 일류 수준 환경기술개발을 통한 환경산업의 신성장 동력화 및 수출산업화
환경산업선진화 기술개발사업	환경산업체 등의 기술수요처가 요구·활용할 환경기술에 대하여 사전수요를 바탕으로 개발하는 매체별 수요자 맞춤형 사업화 기술개발
씨앗기술 성장지원	환경 R&D로 개발된 유망기술의 이전·사업화를 위한후속연구를 지원하여, 연구성과활용 촉진 및 유망기술의 신사업분야 진출에 기여

사업명	추진목표
기술개발사업	
환경정책기반 공공기술개발사업	공공환경기술의 수요를 해결함으로써 국가 환경정책을 실현하고 환경보전 및 국민 삶의 질 향상
화학사고대응 환경기술개발사업	화학사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술개발을 통해 국민이 안전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사회 구현
환경융합신기술 개발사업	미래 환경시장 선점과 신산업 창출 등 환경산업 고도화 기반 구축을 위해 ET, NT, BT, IT 기술 융합을 통한 고효율 환경기술개발
미래유망 녹색환경기술 산업화 촉진사업	현장적용이 시급한 분야의 실증지원을 통해 환경현안 해결 및 중소기업 우수 환경기술의 산업화 촉진
생활공감 환경보건기술개발사업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다양한 환경보건 문제로 생기는 인체 및 생태계 피해 예방을 위한 미래환경보건 기반기술의 확보
기후변화대응 환경기술개발사업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되는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변화 적응 정책 지원을 위한 통합 정책기반기술의 확보
폐자원에너지화 기술개발사업	폐자원의 매립·해양 배출을 최소화하고 발생 폐자원을 환경오염 없이 에너지 자원으로 이용하기 위한 한국형 폐자원에너지화 실증시스템 개발
조류 감시 및 제거활용기술개발사업	주요 수계별 특성을 고려한 조류 감시 및 제거·활용 등 최적 조류관리 실증기술 개발을 통한 국민 물복지 향상
토양·지하수오염방지기술 개발사업	현장기술 개발을 통한 선진적인 토양·지하수 통합관리기반을 구축하고 토양·지하수 환경분야 기술수준을 선진국 대비 90%이상으로 향상
CO ₂ 저장 환경관리기술개발사업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국가 CO ₂ 저장 환경관리시스템 구축 및 CO ₂ 저장을 위한 환경관리기술 개발·실증 및 법·제도 정비

- **환경기술** : 환경오염의 사후정화, 사전예방과 오염된 환경의 복원, 자원의 효율적 이용 및 관리와 관련된 산업기술을 지칭
- **선정평가** : 신규과제 공고를 통해 접수된 과제의 연구 필요성 및 타당성, 연구목표 및 성과지표의 적절성, 연구내용의 충실성 등을 평가하는 평가를 말함
- **연차평가** : 선정된 과제의 실적 및 계획 점검을 위한 평가로 성과목표·지표에 따른 성과달성도 및 차년도 계획 등을 평가하는 평가를 말함
- **최종평가** : 과제가 종료된 후 당초 기술개발목표 대비 전체 실적, 논문·지식재산권·매출 등의 연구성과, 연구성과활용계획 등을 평가하여 과제의 성공·실패여부를 판단하는 평가를 말함

폐기물감량 앞장서는 친환경기업에 도전하세요

- ◇ 2016년 자원순환 선도기업 대상 공모전 실시, 폐기물 사전 발생 예방과 자원화로 감량실적이 우수한 사업장을 발굴 포상
- ◇ 사업장폐기물 발생억제, 재활용 활성화 등 2개 부문 공모

-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폐기물 발생억제와 재활용 활성화를 통해 자원과 에너지가 선순환하는 자원순환사회 실현에 기여한 기업을 발굴하고자 '2016년도 자원순환 선도기업 대상(大賞)'을 공모한다.
 - 공모 참여 방법은 한국환경공단 누리집(www.keco.or.kr)의 '공지사항'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에 5월 16일까지 이메일(3recycle@keco.or.kr) 또는 한국환경공단 폐기물관리처에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 * 우편주소 : (우)22689 인천광역시 서구 환경로42 한국환경공단 폐기물관리처
- 공모 분야는 ① 사업장 폐기물의 원천적 발생억제, ② 발생한 폐기물의 재활용 촉진 등 총 2개 부문이며, 사업장폐기물 감량의무 대상 사업장 외에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는 중소기업체도 응모할 수 있다.
- 접수된 공모사례는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의 심사와 환경부의 심의를 거친다.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실적이 우수한 사례를 제출한 우수기업은 대통령상, 국무총리상, 환경부장관상 등의 표창과 함께 그에 따른 부상이 수여된다.
 - '2016년도 자원순환 선도기업 대상 공모' 수상 기업은 8월 중으로 한국환경공단 누리집(www.keco.or.kr)에서 발표한다.
 - 시상식은 9월 중에 열리는 '자원순환의 날 행사'에서 실시한다.

- 선정된 우수사례는 폐기물 배출 사업장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사례집이 제작돼 보급된다.
- ‘자원순환 선도기업 대상 공모’는 2007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10회를 맞았으며, 기업의 폐기물 감량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사업장 폐기물 감량화의 우수사례를 확산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 자원순환 선도기업은 기술개발, 공정개선 등으로 제품 생산과정에서 폐기물 발생을 사전 억제하거나, 재활용 확대로 자원순환 촉진을 앞장서서 실천하는 친환경기업을 의미한다.

- 붙임 1. 2016년도 자원순환 선도기업 대상 공고문.
2. 질의응답.
3. 전문용어 설명. 끝.

「자원순환 선도기업 대상」 공모

사업장폐기물의 사전발생 예방 및 자원화를 통해 폐기물의 원천적 발생억제를 도모하고 실효성을 갖춘 감량 우수사례를 발굴·포상·전파함으로써 기업의 환경경쟁력 강화 및 자원순환사회 실현 기여를 목적으로 자원순환 선도기업 대상 공모를 시행합니다.

1. 공모부문 및 시상내역

- 공모부문(응모내용) : 폐기물발생억제 및 재활용 촉진 부문
- 시상 :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및 환경부장관 표창과 부상 수여

2. 응모자격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사업장 중 제조업체
 - * 감량지침 준수 의무 대상 및 준수 의무 비대상 사업장 모두 포함
- 행정자치부 「정부포상업무지침」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장
- 환경관련법 위반으로 과태료 이상의 처분을 받은 적이 없는 사업장

3. 제출자료 및 제출방법

- 제출자료 : 신청서 및 공적서(한국환경공단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다운)
- 제출방법 : E-mail(3recycle@keco.or.kr) 또는 우편접수(방문접수 불가)
 - * 주소 : (우)22689 인천광역시 서구 환경로42한국환경공단 폐기물관리처
- 접수기간 : 2016. 3. 16(수) ~ 5. 16(월) (마감일 18시 도착분까지 유효)

4. 수상자 발표 및 시상

- 수상자 발표 : 2016. 8월 중, 한국환경공단 홈페이지(www.keco.or.kr)에 발표
- 수상자 시상 : 2016년 자원순환의 날 행사일(9월 중) 예정

5.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공모 사업장에 대한 심사결과에 따라 시상 대상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음
- 수상 후에도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한 수상이 밝혀질 경우 수상을 취소하고 상금은 환수 조치함
- 수상작은 폐기물 감량기법 우수사례집으로 제작하여 배포함.
- 문의 : 폐기물관리처 (032-590-5092~5094)

<1> 자원순환 선도기업이란?

- 자원순환 선도기업은 기술개발, 공정개선 등으로 제품 생산과정에서 폐기물 발생을 사전 억제하거나, 재활용 확대로 자원순환 촉진을 선도적으로 실천하는 친환경기업을 말함

<2> 자원순환 선도기업 주요 평가항목은?

- 폐기물 감량·재활용 시설에의 투자 실적, 감량 개선실적, 국내 재활용사업 활성화에의 기여도, 감량·재활용의 경제적 효과 및 비용 효율성 등을 평가함

<3> 자원순환 선도기업으로 선정되면 어떤 혜택이 있나?

- 환경부 심의를 통해 대통령, 국무총리, 환경부장관 표창과 그에 따른 부상이 수여되며, 언론보도 및 우수사례집 제작·배포 등을 통해 해당 기업의 친환경적 이미지를 홍보하고 있음

<4> 폐기물처리 또는 재활용업체도 공모 가능한가?

- 자원순환 선도기업 공모는 사업장폐기물 감량 의무 대상 사업장과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공모하므로, 제조업체가 아닌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업체는 대상에서 제외됨
- 또한 행정자치부 「정부포상업무지침」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업장과 환경관련법 위반으로 과태료 이상의 처분을 받은 사업장 또한 공모 대상에서 제외됨

- 사업장폐기물 감량의무 대상 사업장 : 최근 3년간의 연평균 배출량을 기준으로 지정폐기물을 100톤이상 배출하는 자 또는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1천톤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 사업장폐기물 감량 : 사업장에서 공정개선 및 폐기물 재활용 등을 통해 단위제품 생산량당 또는 매출액당 폐기물의 발생량 및 최종처리량을 줄이거나 유해성 등을 줄이는 것을 의미
- 자원순환의 날 : 지구환경 보호와 자원 재활용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2009년 9월 5일 환경부를 비롯한 산하기관, 자원순환 관련 협회 및 관계자가 모인 가운데 매년 9월 6일을 '자원순환의 날'로 지정

청년일자리 정책에 청년대표의 직접 참여 강화

수요자인 청년 관점에서의 모니터링·정책개발 활성화

— 3.15(화), 2016년 제1차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 개최 —

- 앞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청년고용촉진대책에 청년의 직접 참여를 강화하고, 실무 분과위원회가 신설되어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이하 “청고특위”)의 기능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 아울러 일자리 사업 개편방안 마련 과정에서도, 청고특위를 통해 수요자인 청년의 관점에서 모니터링하고 그 의견을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 고용노동부는 3월 15일(화) 서울 종로구 소재 MJC보석직업전문학교에서 청고특위 위원들과 청년패널 5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6년 제1차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 위와 같은 내용이 담긴 ①범정부 청년고용촉진대책 실효성 및 체감도 제고 방안과 ②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 확대개편 및 운영활성화 방안을 논의하였다.
- 그간 청고특위에 수요자인 청년의 목소리가 직접 반영되는 통로가 부족하고, 정책 개발 및 평가 기능이 미흡하여,
 - 각종 청년고용지원 사업이 공급자 중심으로 설계·전달되어 청년들이 쉽게 이용하기 불편해 체감도와 효과성이 떨어진다는 등의 지적이 있었다.
- 이를 개선하기 위해, 청년대표를 청고특위 위원으로 정식 위촉하고, 동 위원회를 중심으로 정부·자치단체 청년일자리 정책과 사업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 동 위원회 산하에 청년대표, 전문가, 관계 부처 실무자 등이 참여하는 실무위원회(정책개발분과 및 현장모니터링분과)를 신설하여,
 - 청년의 관점에서 청년고용촉진대책의 이행상황을 세세히 모니터링 하고, 향후의 대책 수립, 예산편성 등에 반영하고,
 - 실효성이 떨어지는 사업 등에 대해서는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개선의견을 수렴해 나갈 것이다.

□ 이기권 고용부장관은 청년패널 등의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들은 후,

- “최근 높은 청년실업률은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 증대, 노동시장 이중구조화 등 구조적 문제가 누적된 결과”라며, “모든 책임 있는 사회주체가 함께 노동개혁 등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 또한, “노동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해 기업들이 채용에 적극 나설 환경을 만들어줘야 하나, 노동개혁 지연으로 2월 취업시즌에도 불구하고 주요 대기업의 채용규모가 확정되지 않는 등 청년일자리 문제가 더 어려워질 것으로 우려 된다”고 말하였다.
- “현재 수요자의 눈높이에 맞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체감도와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향으로 청년 일자리 문제를 고민 중”이라고 하며,
 - “첫째, 4대 개혁 완수를 통해 노동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기업들의 확대 투자를 유도함으로써,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어 청년들이 중소기업으로도 쉽게 갈 수 있도록 해야 하며,
 - 둘째, 청년이 손쉽게 구인 정보를 얻고, 기업은 원하는 인재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워크넷”이 구인·구직에 중심이 되도록 하고,
 - 셋째, 창조혁신센터 고용존, 지역별·산업별 인적자원위원회 등을 통해 기업의 실제 교육·훈련수요를 정확히 파악하여 NCS 기반

으로 기업의 수요에 맞는 인재를 양성해야 한다.”는 방향을 제안했다.

-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러한 방향성을 가지고 기업 및 청년층과 논의하며 범정부적으로 정책으로 구체화해 나가자고 제안하면서,
 - 특히 “현재도 청년고용상황이 어렵지만 노동시장 관련 제도의 불확실성이 이어지면 정년 60세 시행과 함께 청년고용은 더욱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19대 국회안에서 노동개혁입법이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며 노사정 모두에게 절실하게 호소했다.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 개요>

- ◇(근거)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4조
- ◇(구성) 고용노동부 장관(위원장), 관계부처 차관, 교육단체, 사업주단체, 청년 단체의 대표 및 관계자, 전문가 등 20인 이내(임기 2년, 연임가능)
- ◇(역할) 청년고용촉진 대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청년 고용실적에 관한 사항 등 청년고용 관련 주요 사항을 심의·평가

□ 일 시: '16. 3.15(화), 14:00~15:35

□ 장 소: MJC보석직업전문학교 8층 세미나실

* 서울 종로구 돈화문로 5가길 1(피카디리빌딩 8층, 02-488-5301)

□ 참 석: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 위원 20명 및 청년패널 5명

□ 안 건

- ① 범정부 청년고용촉진대책 체감도 및 실효성 제고 방안
- ②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 확대개편 및 운영활성화 방안

□ 세부일정

시 간		내 용	비 고
14:00~14:10	10'	훈련과정 참관	훈련기관 대표 (김종목)
14:10~14:15	5'	개회 및 참석자 안내	사회: 청년고용기획과장
14:15~14:20	5'	장관님 인사말씀	
14:20~14:30	10'	범정부 청년고용촉진대책 체감도 및 실효성 제고방안	청년여성고용정책관
14:30~14:35	5'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 확대개편 및 운영활성화 방안	청년여성고용정책관
14:35~15:30	55'	안건 토론	장관님 주재
15:30~15:35	5'	장관님 마무리말씀	

* 모두 말씀까지 언론 공개, 이후 보도 참고자료 배포

다문화인식, 4년 전보다 개선되고 젊은 층일수록 수용적

- 여성가족부, '2015년 국민 다문화수용성 조사 결과' 발표 -

- ◆ 다문화수용성 지수, 더 수용적으로 변화 : 성인 '11년 51.2점 → '15년 54.0점
- ◆ 젊은 층일수록(청소년(중·고생) 67.6점 > 30대 56.8점 > 50대 51.5점),
다문화 교육·활동 경험이 많을수록(교육 경험 3회 이상 64.0점 > 1회 56.3점),
상호관계가 긴밀할수록(이주민·외국인 직장동료 있는 경우 60.4점 > 단순이웃 52.4점)
다문화에 수용적인 것으로 나타나
- ◆ 이주민·외국인 다수 취업 업종 종사자(단순노무 51.2점), 전업주부(51.4점)
등은 다문화수용성 취약해

- 연령대나 직종, 다문화 교육·활동 경험, 접촉·교류 여부 등에 따라 다문화수용성이 차이를 보여, 다문화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산을 위해서는 대상별 눈높이와 상황에 맞춘 다문화 이해교육과 홍보가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 연구 의뢰하여 (주)한국갤럽에서 조사한 '2015년 국민 다문화수용성 조사'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3월 14일(월) 밝혔다.
- 이번 '다문화수용성 조사'는 통계청 승인을 받은 최초 정기조사로, 전국 19세~74세 성인 4,000명과 청소년(122개 중·고교 재학생) 3,640명을 대상으로 문화개방성, 국민정체성 등 8개 구성요소별 설문 결과를 종합하여 '다문화수용성 지수'를 산출했다.

<국민 다문화수용성 조사>

○ 조사기간 : '15년 9월 10일 ~ 11월 10일 (2개월 간)

○ 조사대상 및 방법

- [일반국민] 전국 19세~74세 성인 4천명, 가구방문 면접조사

- [청소년] 전국 122개 중·고교 재학생 3,640명, 학교방문 집합조사

※ 통계청 승인받은 최초 정기조사, 매 3년마다 지수 발표 및 정책효과성 분석 예정
(’11년 성인·’12년 청소년 대상으로 일회성 조사를 실시한 바 있음)

□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연령대 낮을수록 다문화사회에 수용적

○ 조사 결과, 성인의 다문화수용성 지수는 53.95점, 청소년은 67.63점으로 조사되었다.

- 성인의 경우 지난 '11년 말에서 '12년 초에 걸친 조사 당시 다문화수용성 지수(51.17점)보다 2.78점 상향된 결과로, 종전보다 다문화에 대한 생각이 다소 수용적인 방향으로 변화되었음을 보여준다.

* 청소년의 경우에도 '12년말 조사된 지수(60.12점)보다 향상되었으나, 조사 척도의 차이('12년 말 5점 척도 → '15년 6점 척도)로 단순비교는 곤란

- 연령대별로는 청소년(중·고생) 67.63점, 20대 57.50점, 30대 56.75점, 40대 54.42점, 50대 51.47점, 60대 이상 48.77점으로 젊은 연령층일수록 다문화에 수용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2. 주요 선진국에 비해 다문화수용성 낮은 편

○ 성인(일반국민) 대상 주요 조사항목을 국제지표 항목과 비교해 본 결과, 우리나라의 다문화수용성은 여전히 주요 선진국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예를 들면, '일자리가 귀할 때 자국민을 우선 고용해야 한다'와 '외국인 노동자를 이웃으로 삼지 않겠다'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자신을 세계시민으로 생각한다'는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주요 국제지표 항목>

(단위 : %)

구 분	한국	미국	독일	스웨덴	호주
일자리가 귀할 때 자국민 우선 고용에 찬성	60.4	50.5	41.5	14.5	51.0
외국인 노동자/이민자를 이웃으로 삼고 싶지 않음	31.8	13.7	21.5	3.5	10.6
자신을 세계시민으로 생각(대체로 또는 매우 그렇다)	55.3	69.1	62.3	82.0	79.5

* 출처 : '15년 성인(일반국민) 다문화수용성조사, World Value Survey('10~'14)

3. 다문화 교육·활동 참여 경험, 다문화 수용에 긍정적 경향

- 다문화 교육·행사, 이주민 관련 자원봉사·동호회 등 참여 경험이 있는 경우 성인·청소년 모두 다문화수용성 지수가 높게 나타나, 다문화 이해교육과 다양한 활동 참여가 다문화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높이는 데 효과적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 특히, 다문화 교육을 한번 받은 성인의 경우 수용성 지수가 56.29점, 두 번 받은 경우 55.13점에 그친데 반해, 세 번 이상 받은 경우 수용성 지수가 64.03점으로 크게 높아져 지속적·반복적 교육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에 비해, 우리 국민의 다문화 교육 이수율과 활동 참여가 매우 저조*한 것으로 파악되어 개선책 마련이 요구된다.

* 성인 : 다문화 교육 참여(5.5%), 자원봉사 참여(4.2%), 동호회 참여(2.7%)

* 청소년(최근 1년간) : 다문화 교육 참여(25.7%), 다문화 활동 참여(4.6%)

4. 상호 이해관계 있는 내국인, 다문화수용성 상대적으로 낮아

- 외국인·이주민을 친척(55.67점), 친구(58.1점), 직장동료(60.38점)로 둔 경우 다문화수용성 지수가 높았으나, 단순히 이웃(52.41점)하여 사는 경우에는 지수 평균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직종별로는 외국인·이주민 다수 취업 업종 종사자의 경우 다문화수용성이 취약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단순노무(51.22점), 농림어업(51.83점), 기능·조립(52.96점)

- 이는 외국인·이주민과 접촉·교류가 많을수록 다문화에 수용적인 태도를 보이거나, 취업 경쟁이나 생활공간 공유 등 상호 현실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문화수용성이 낮은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해석된다.

5. 다문화수용성 낮은 대상별 맞춤 대책 필요

- 고연령층(50대 51.47점, 60대 이상 48.77점), 전업주부(51.40점) 등 다문화수용성이 낮은 집단의 경우, 이주민을 자연스럽게 접함으로써 다문화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는 대상별 맞춤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 여성가족부는 이번 조사결과에 따라, 유관부처와 협력해 수용성 취약계층에 한층 다가가는 맞춤형 교육·홍보, 온라인교육 사이트 운영 등을 통한 다문화 이해교육 기회 확대, 청소년 수련시설 등과 연계한 공교육 강화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 강은희 여성가족부 장관은 “국내 다문화가족 82만 명, 외국인 170만 명인 시대를 맞아 다문화사회로의 이행은 이제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생활 속에서 ‘다문화’라는 말 자체를 국민 누구도 의식하지 않을 때 진정한 사회통합이 이뤄지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 “이번 조사결과 다문화이해교육과 활동 경험, 교류 여부 등이 다문화수용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된 만큼, 다문화 이해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다양한 연령과 직종을 포함한 전 계층에서 다문화가족과 교류와 소통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더욱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붙임】 2015년 국민 다문화수용성 조사 결과(요약)

I

조 사 개 요

- 조 사 명 : 국민 다문화수용성 조사 (국가승인통계 제15419호)
- 조사기간 : '15년 9월 10일 ~11월 10일 (2개월 간)
- 조사대상 및 방법
 - [일반국민] 전국 19세~74세 성인 4천명, 가구방문 면접조사
 - [청소년] 전국 122개 중·고교 재학생 3,640명, 학교방문 집합조사
- 조사내용
 - 다문화수용성 지수 조사 : 8개 구성요소별 측정 값 및 지수 산출

구 성 요 소	다양성	① 문화개방성	다양한 배경의 이주민 유입·정주 인정
		② 국민정체성	국민 됨의 자격기준에 대해 다양성 인정
		③ 고정관념 및 차별	외국 이주민에 대한 고정관념과 차별
	관계성	④ 일방적 동화 기대	이주민의 우리문화 동화 및 순응 기대
		⑤ 거부·회피 정서	이주민 접촉상황에서 비합리적인 부정적 정서
		⑥ 상호교류 행동 의지	이주민과의 친교관계를 맺고자 하는 의지
	보편성	⑦ 이중적 평가	경제개발 수준, 문화적 배경 등에 등급을 둠
		⑧ 세계시민 행동 의지	인류애와 같은 보편적 가치 추구 및 실천 의지
다문화수용성 지수			위 8개 구성요소별 측정값의 종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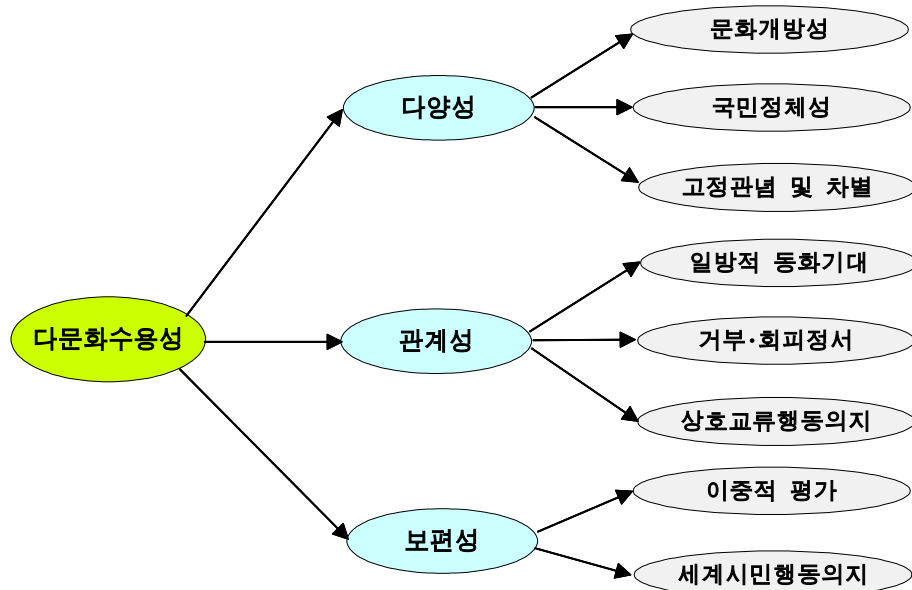
- 집단별(성, 연령대, 소득 수준 등), 다문화 관련 변수별(외국인·이주민 접촉유형, 다문화 교육 및 활동 참여 등) 지수 비교
- 조사기관 : (주)한국갤럽 (* 조사 개발·연구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통계청 승인받은 최초 정기조사로 향후 3년마다 지수 발표 및 정책 효과성 분석 예정('11년 성인·'12년 청소년 대상으로 일회성 조사를 실시한 바 있음)

【참고 1】

< 다문화수용성 척도 >

- 2011년과 2012년에 걸쳐 성인용 및 청소년용으로 개발된 다문화수용성 진단도구(이하 ‘척도’라 함)를 통해 성인 4,000명, 중학교 재학생 3,640명을 대상으로 다문화수용성지수를 산출하였음
- 다문화수용성 척도는 3개 차원의 8개 구성요소로 이루어졌으며, 전체 척도의 신뢰도(Cronbach α 계수)*는 성인용은 .91이었고, 청소년용은 .94였음



< 다문화수용성 차원 및 구성요소 >

- 다문화수용성 척도(‘문화개방성’, ‘국민정체성’, ‘고정관념 및 차별’, ‘일방적 동화 기대’, ‘거부·회피정서’, ‘상호교류행동의지’, ‘이중적 평가’, ‘세계시민행동의지’), 다문화교육 및 관련 활동 참여 경험, 이주민과의 접촉 유형과 빈도 등을 포함한 조사표를 개발하여, 2015년 09월 10일~2015년 11월 10일까지 전국 성인 4,000명과 122개 중·고교 재학생 3,640명을 대상으로 조사함

* 신뢰도 계수 : 검사도구가 측정하고자 하는 것을 일관성 있게 측정하는가의 신뢰도를 평가하는 계수임. 이 계수는 0~1의 값을 가지며, 높을수록 신뢰도가 높음(보통 0.8~0.9의 값이면 신뢰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보며, 0.7 이상이면 바람직한 것으로 봄)

【참고 2】

< 다문화수용성 지수 >

- 다문화수용성 척도에서 각 문항별로 '1. 전혀 그렇지 않다~6. 매우 그렇다'의 6점 기준(청소년용은 2012년 5점 척도였다가, 2015년 6점 척도로 통일)으로 얻어진 응답결과를 바탕으로,
- 8개 하위 구성요소별 부여된 가중치를 종합하여, 100점 만점으로 환산된 다문화수용성 지수를 산출하였음

< 일반국민 및 청소년 다문화수용성 척도의 구성요소별 의미와 가중치 >

구성요소		주요 측정 내용	가중치	
			일반국민	청소년
다양성	① 문화개방성	다양한 배경의 이주민 유입·정주 인정	12	11
	② 국민정체성	국민됨의 자격기준에 대해 다양성 인정	13	13
	③ 고정관념 및 차별	외국 이주민에 대한 고정관념과 차별	14	16
관계성	④ 일방적동화기대	이주민의 우리문화 동화 및 순응 기대	12	11
	⑤ 거부·회피정서	이주민 접촉상황에서 비합리적인 부정적 정서	14	15
	⑥ 상호교류행동의지	이주민과의 친교관계를 맺고자 하는 의지	12	13
보편성	⑦ 이중적 평가	경제개발 수준, 문화적 배경 등에 등급을 둠	12	11
	⑧ 세계시민행동의지	인류애와 같은 보편적 가치 추구 및 실천의지	11	10
다문화수용성지수(KMAI-A)		8개 구성요소별 측정값의 종합	100	100

※ 청소년 조사의 가중치는 '12년 5점 척도에서 '15년 6점 척도로 조정됨에 따라 '15년 조사 표본을 기준으로 새롭게 산출된 가중치임

1 일반국민 대상 조사 결과

1-1. 주요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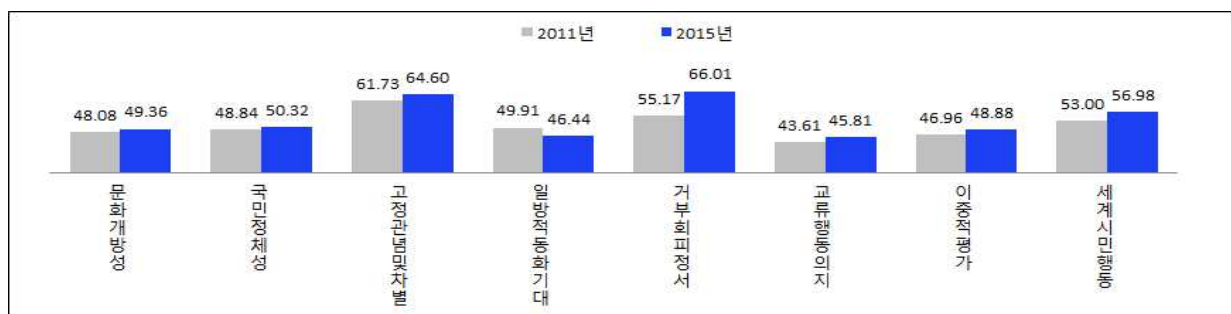
□ '15년 다문화수용성 지수 : 53.95점

- 일반국민(성인)의 다문화수용성지수는 '11년 51.17점에서 '15년 53.95점으로 2.78점 높아져, 국민들의 다문화에 대한 생각이 중립적인 경향에서 다소 수용적인 방향으로 변화됨
- 이는 '11년에 비해 다문화 교육, 다문화 관련 활동 참여, 외국인·이주민 접촉 빈도의 증가 등이 반영된 결과로 판단됨

□ 다문화수용성 지수 구성요소별

- '(이주민과) 상호교류 행동 의지', '(이주민의) 일방적 동화 기대', '(출신 국별) 이중적 평가, (이주민의 유입·정주를 인정하는) 문화 개방성', '(국민 됨의 자격기준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국민정체성' 항목은 다문화수용성 지수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조사됨
- '11년에 비해 '(이주민에 대한) 거부·회피 정서', '(인류애 등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는) 세계시민 행동 의지' 및 '(이주민에 대한) 고정 관념 및 차별' 항목에서의 수용성은 높아짐

<'11년 - '15년 일반국민 다문화수용성 하위 구성요소별 조사 결과>



□ 집단별, 다문화 관련 변수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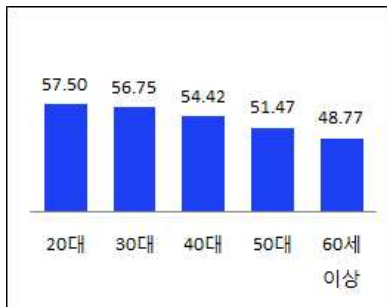
- 집단별(연령대, 직업 등), 변수별(이주민 접촉, 다문화 교육·활동 등) 조사 결과는 전반적으로 '11년과 유사한 경향성을 띠

1-2. 집단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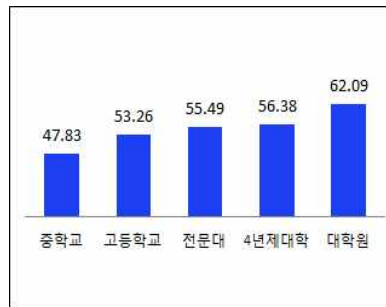
□ 연령대, 교육 및 소득 수준별

- 젊은 층, 교육 및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수용성지수가 높은 경향
 - * 50대 이상, 고졸 이하, 월 소득 2백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수용성 지수가 평균에 미달하므로 이들 계층에 대한 수용성 향상 정책 집중 필요

<연령대별>



<교육수준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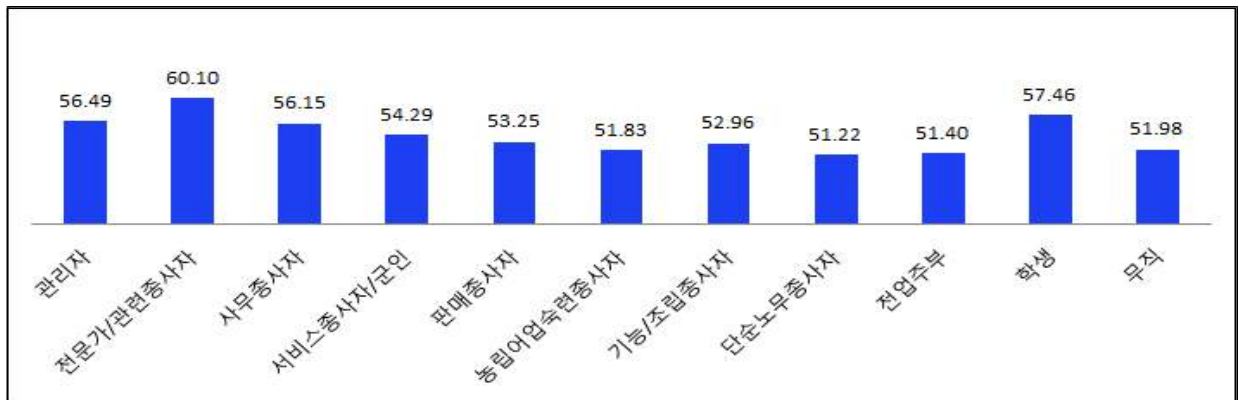
<소득수준별>



□ 직업별

- 단순노무종사자(51.22), 전업주부(51.40), 농림어업숙련종사자(51.83), 기능/조립종사자(52.96) 등은 지수 평균을 하회함
 - * 수용성지수가 낮은 직업들은 대체로 외국인 근로자 다수 취업 분야로 이들 분야 종사 내국인과 전업주부들의 다문화수용성 제고 노력 강화 필요

<직업별 다문화수용성 지수 비교>



□ 기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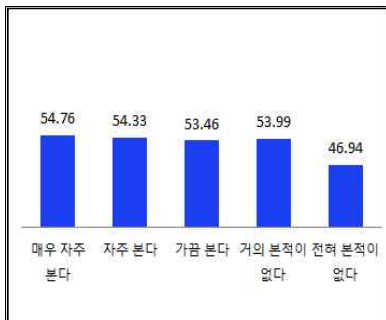
- 성별(남 54.66, 여 53.24), 혼인별(미혼 56.87, 기혼 52.94), 지역규모별(대도시 52.96, 중소도시 54.55, 읍·면 56.20), 권역별(서울/경기 53.88, 충청/강원 56.40, 호남/제주 53.99, 영남 52.83) 지수에 약간의 차이

1-3. 다문화 관련 변수별 비교

□ 단순목적 빈도, 해외여행·체류·거주 경험

- 길거리, 상점 등 주변에서 외국인이나 이주민에 대한 목적빈도가 높을수록, 해외여행 빈도가 높거나 일정기간 이상 해외체류·거주 경험이 있는 경우 다문화수용성지수가 높은 경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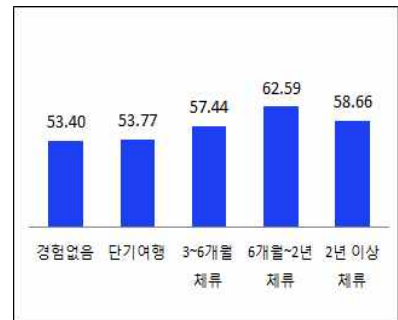
<단순목적 빈도>



<해외여행 빈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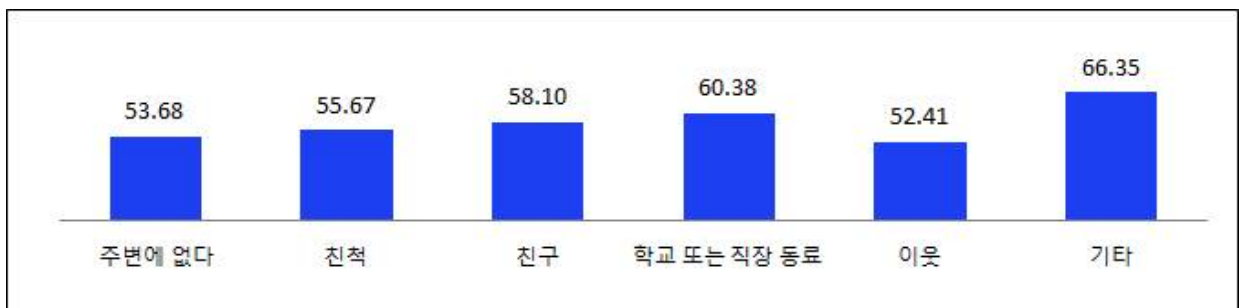
<해외체류 기간>



□ 접촉 유형

- 외국인·이주민이 학교/직장 동료, 친구 등인 경우 수용성이 높으나, 단순 이웃인 경우에는 오히려 수용성지수가 평균보다 낮은 경향

<접촉유형별 다문화수용성 지수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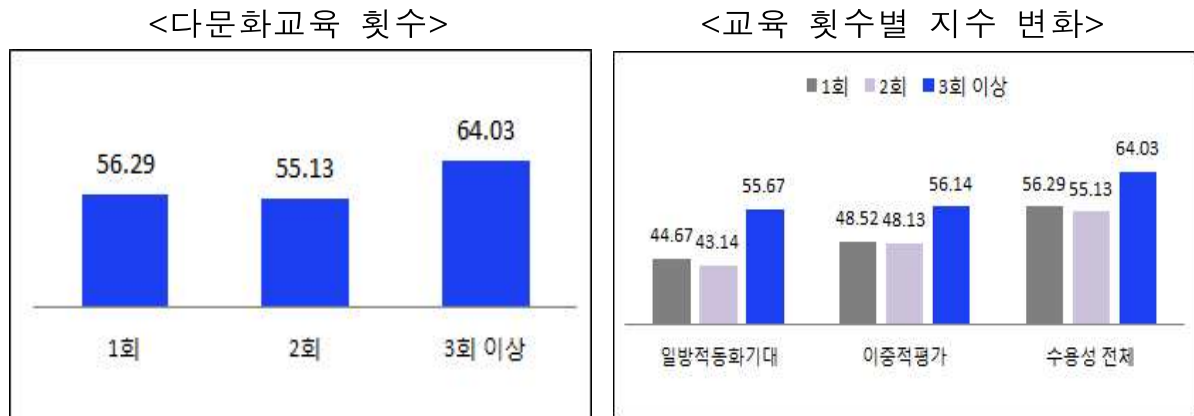


□ 다문화 교육 및 관련 활동 참여 경험

- 다문화 교육, 행사, 자원봉사 및 외국인·이주민이 함께하는 동호회 활동 경험이 있는 경우(다문화 교육 59.13, 행사 60.51, 자원봉사 60.79, 동호회 활동 64.65) 다문화수용성이 높음

* 다문화 교육(5.5%), 봉사 활동(4.2%), 동호회 활동(2.7%) 경험이 있는 국민이 소수에 불과하므로 일반국민 대상 다문화 접촉 기회 제공 확대 필요

- 다문화 교육을 3회 이상 받은 경우 다문화수용성이 높게 나타나는 등 지속적·반복적 접촉 경험이 수용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침
- 특히, ‘(이주민의) 일방적 동화 기대’나 ‘(출신 국에 따른) 이중적 평가’ 요소에서 다문화 교육을 많이 받을수록 높은 수용성을 나타냄



[참고] 주요 설문항목 국제지표와 비교

- 일반국민 다문화수용성 관련 주요 항목을 국제 비교 시 여전히 주요 선진국에 비해 낮은 것으로 조사됨

<주요 국제지표 항목>

(단위 : %)

구 분	한국	미국	독일	스웨덴	호주
일자리가 귀할 때 자국민 우선 고용에 찬성	60.4	50.5	41.5	14.5	51.0
외국인 노동자/이민자를 이웃으로 삼고 싶지 않음	31.8	13.7	21.5	3.5	10.6
자신을 세계시민으로 생각 (대체로 또는 매우 그렇다)	55.3	69.1	62.3	82.0	79.5

* 출처 : '15년 일반국민 다문화수용성조사, World Value Survey('10~'14)

2 청소년 대상 조사 결과

2-1. 주요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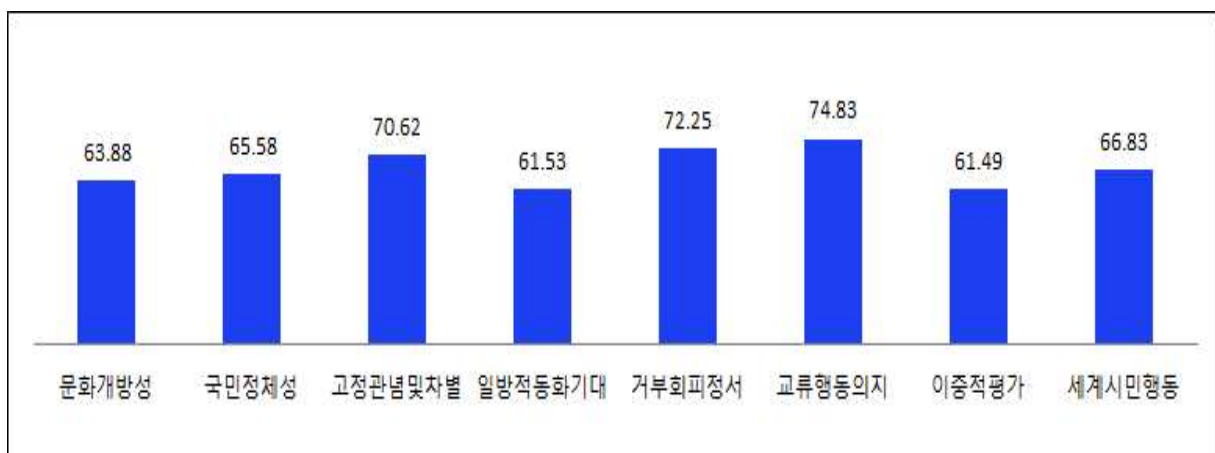
□ '15년 청소년 다문화수용성 지수 : 67.63점

- 청소년의 수용성 지수는 67.63점으로 다문화에 대한 생각이 다소 긍정적인 것으로 조사됨
- '15년 일반국민(성인)의 수용성 지수(53.95점)보다 매우 높으며, '12년 청소년 다문화수용성 지수(60.12점*)에 비해 향상된 수준임
- * 조사 척도 변경('12년 5점 → '15년 6점 척도)으로 '12년 청소년 다문화 수용성 지수와 단순 비교는 곤란

□ 청소년 다문화수용성 하위 구성요소별

- '(이주민과) 교류 행동 의지', '(이주민에 대한) 거부·회피 정서', '(이주민에 대한) 고정관념 및 차별' 항목의 수용성은 높은 편임
- 일반국민 조사 결과와 마찬가지로, '(출신 국에 따른) 이중적 평가', '(이주민에 대한) 일방적 동화 기대' 등 항목의 수용성은 상대적으로 낮음

<'15년 청소년 다문화수용성 하위 구성요소별 조사 결과>



2-2. 집단별 비교

□ 성별, 학교급별

-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중학생이 고등학생에 비해 수용성이 높게 나타남



□ 기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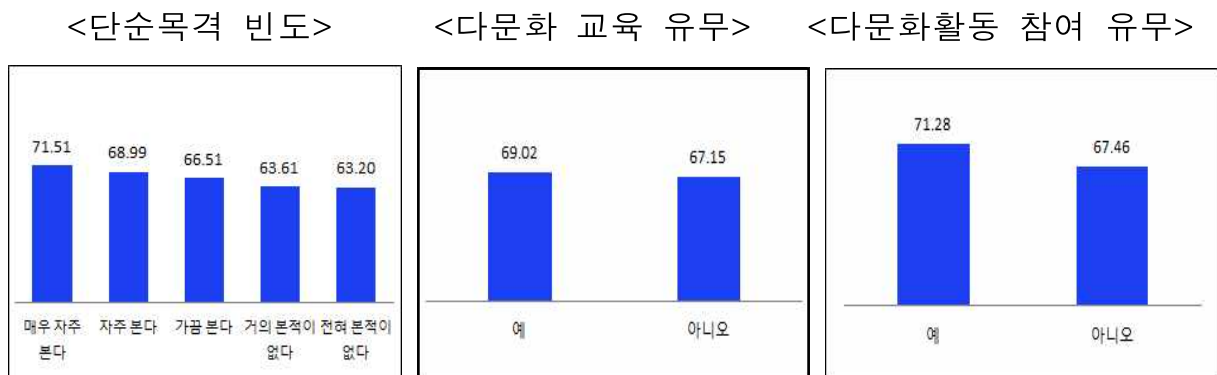
- 지역규모별(대도시 69.05, 중소도시 68.07, 읍·면 65.54), 권역별(서울/경기 68.32, 충청/강원 65.55, 호남/제주 66.24, 영남 68.05), 가구소득별(중상 이상 66.09, 중 68.05, 중하 이하 68.09) 수용성에 약간의 차이

2-3. 다문화 관련 변수별 비교

□ 목적빈도, 다문화 교육·활동 경험(일반국민 조사 결과와 유사 경향)

- 외국인·이주민에 대한 목적 또는 접촉빈도가 높거나, 다문화 교육 또는 활동 참여 경험에 있는 청소년이 수용성이 높게 나타남

* 청소년 중 최근 1년간 다문화 교육(25.7%) 및 활동(4.6%)을 경험했다는 응답이 낮아, 학교 교과나 청소년수련원 등 교육·활동 활성화 필요



Ⅲ

주요 정책제언

□ 내용·대상별 접근 방안 모색 등 보다 세분화된 정책 추진

- ‘일방적 동화 기대’나 ‘이중적 평가’ 등에서의 국민 인식 개선을 위해서는 내면화된 변화가 요구되므로 심화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 사후 효과성 검증 등 교육 내실화 도모
- 저학력·고연령층, 기능/조립종사자 및 전업주부 등 수용성 낮은 대상별 눈높이에 맞춘 다문화 이해 소양교육, 홍보에 집중

□ 다문화 이해교육 대상자 확대 및 지속적 교육 실시

- 국민 대다수가 교육 기회를 갖지 못하고 있으므로, 일반인 대상 찾아가는 다문화이해교육 확대 및 사회교육 또는 평생교육 틀에서 교육 확대방안 적극 모색
- 1~2회 교육 참여는 다문화수용성 제고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므로, 3차수 이상 체계적인 교육 운영 검토

□ 이주민과 내국인 교류 지원 프로그램 확산

- 이주민과 내국인 간 접촉·교류가 수용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이주민 다수 종사 업종과 이주민 집중 거주지역 등에서 상호간 참여·교류 촉진 프로그램 제공 활성화

□ 청소년 다문화수용성 제고 위한 공교육 강화

- 다문화 교육·활동 참여 청소년이 적어, 학교 내 다문화 이해교육 및 청소년수련관 등 학교 밖 프로그램 연계 등을 통한 청소년 다문화 활동 기회 다변화 방안 모색

교통복지지수 평가 순위 경남 경기 세종 충북 순

- 2015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결과 발표 -

-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10개 시·도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5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 특별·광역시와 10개시·도 (세종특별자치시 포함)를 대상으로 격년으로 표본조사, 5년마다 전국 대상 전수조사 실시

-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기준적합도(70%)와 만족도 조사(30%) 결과를 가중평균하여 10개 시·도의 교통복지 수준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

- 시·도별 순위는, 경남> 경기> 세종> 충북> 충남> 강원> 전남> 제주> 전북> 경북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 경상남도는 특별교통수단 보급률/이용률, 교통수단 기준적합 설치율, 저상버스 보급률, 교통복지행정에서 상위 수준을 나타내어 10개 시·도 중 가장 높게 평가되었으며,
- 반면 경상북도는 2013년에 이어 가장 낮은 순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으며, 특별교통수단 보급률을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10개 시·도의 평균값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나 최하순위로 평가되었다.

- 교통수단, 여객시설, 도로(보행환경)를 대상으로 한 이동편의시설의 기준적합 설치율은 66.7%로 10개 시·도를 대상으로 조사한 '13년도의 기준적합 설치율 64.8%에 비해 1.9% 증가하였다.

- 이동편의시설별로 보면, 교통수단이 72.9%, 여객시설 61.5%, 도로(보행환경) 65.8%로 각각 조사되었다.

* **기준적합 설치율** : 이동편의시설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상의 세부 항목별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되어 있는 정도

- **교통수단별 기준적합 설치율**은 항공기(98.3%)가 가장 높고, 10년이 넘는 노후 선박이 대부분인 여객선(17.0%)이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 **여객시설별 기준적합 설치율**은 철도역사(76.9%)와 공항터미널(75.3%)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여객자동차터미널(56.9%), 버스정류장(34.2%)이 낮게 조사되었다.

□ 또한 일반인과 교통약자 총 1,310명을 대상으로 이동편의시설에 대한 이용자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이동편의시설에 대한 만족도는 평균 61점으로 나타났다.

○ **이동편의시설별로 보면**, 교통수단에 대한 만족도는 63점, 여객시설에 대한 만족도는 61점, 도로(보행환경)에 대한 만족도는 61점으로 나타났다.

- **교통수단의 경우**, 항공기의 만족도가 68점으로 가장 높았고, 여객선의 만족도는 58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 **여객시설의 경우**, 공항터미널의 만족도는 68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여객자동차터미널과 여객선터미널의 만족도는 56점으로 낮게 나타났다.

□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조사 결과, 이용 빈도가 높은 여객자동차터미널과 버스정류장의 시설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교통약자가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이동편의 실태조사 결과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관련기관에 시정을 요구하고, 지속적으로 개선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참고1

교통약자 현황 및 통행실태

□ 교통약자 세부현황

구 분	2014년	2015년	전년대비 증가율(%)
계	12,779,931	12,985,611	1.61
장애인	1,468,556	1,438,195	-2.07
고령자	6,250,986	6,520,607	4.31
임산부	436,455	435,435	-0.23
어린이	2,322,614	2,297,070	-1.10
영유아동반자	2,301,320	2,294,304	-0.30

<참고> 교통약자인구의 중복산정을 피하기 위하여 장애인 중 65세 이상 고령자, 어린이는 제외

<주> 2014년은 2013년 말, 2015년은 2014년 말 기준임

□ 주로 이용하는 교통수단(단위 %)

구 분		사례수	점유율(%)									
			도보	휠체어	자가용	버스	지하철	철도	택시	특별교통수단	무료셔틀	기타
전 체		2,272	25.3	5.1	20.6	26.8	4.5	3.3	7.1	4.1	2.1	1.1
교통약자별	장애인	511	21.1	15.1	13.7	17.8	3.3	2.0	2.9	15.3	5.1	3.7
	지체장애인	220	18.6	29.5	15.0	15.5	1.4	0.5	2.3	12.7	4.5	0.0
	시각장애인	133	18.7	0.0	7.5	9.0	5.3	3.0	3.8	30.1	11.3	11.3
	청각장애인	96	24.0	1.0	21.9	29.0	6.3	4.2	4.2	5.2	0.0	4.2
	중복장애인	62	30.6	17.7	9.7	27.5	1.6	1.6	1.6	8.1	1.6	0.0
	임산부	263	19.0	0.0	33.5	31.5	3.8	0.4	11.8	0.0	0.0	0.0
	고령자	573	32.3	3.3	15.4	27.1	4.2	3.7	8.9	1.4	2.8	0.9
	소 계	1,347	25.4	7.1	18.3	24.5	3.8	2.4	7.2	6.4	3.1	1.8
일반인		925	25.1	2.2	23.9	30.1	5.6	4.5	6.9	0.9	0.6	0.2

참고2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기준적합 설치율 및 만족도

□ 이동편의시설 기준적합 설치율 및 만족도

구 분		2015년 (10개 시·도)		2013년 (10개 시·도)	
		기준적합률	만족도	기준적합률	만족도
교통 수단	버스	82.7	60	81.5	56
	철도	93.5	64	93.2	62
	항공기	98.3	68	98.1	68
	여객선	17.0	58	16.7	58
	평균	72.9	63	72.4	61
여객 시설	여객자동차터미널	56.9	56	51.4	56
	버스정류장	34.2	60	32.7	60
	철도역사	76.9	64	74.0	60
	공항터미널	75.3	68	74.9	66
	여객선터미널	64.2	56	63.3	56
	평균	61.5	61	59.3	60
보행환경		65.8	61	62.6	59
평균		66.7	61	64.8	60

□ 교통복지지표간의 중요도(가중치) 결정

- 지표간 가중치를 구하기 위하여 교통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
- 10개 시·도의 가중치는 2013년 평가시 적용한 가중치를 적용

□ 교통복지지표간 가중치

구분	가중치
여객시설의 이동편의시설 기준적합률	0.146
교통수단의 이동편의시설 기준적합률	0.136
여객시설 주변 접근로상의 보행시설 기준적합률	0.124
보행자 사고율	0.110
저상버스 보급률	0.101
특별교통수단 보급률	0.088
특별교통수단 운행률	0.069
고령자 및 어린이 사고율	0.104
교통행정	0.122
계	1.000

□ 교통복지수준 평가결과 종합

구분	이동편의시설 기준적합율				여객시설주변		보행자 사고율		저상버스	
	여객시설		교통수단		접근로보행 환경				보급률	
	환산값	순위	환산값	순위	환산값	순위	환산값	순위	환산값	순위
경기	5.8	10	12.7	2	12.4	1	9.5	3	6.7	6
강원	13.6	2	10.0	5	9.1	5	5.9	8	9.4	2
충북	8.8	7	8.2	7	10.7	3	8.1	5	8.1	4
충남	12.7	3	10.0	5	6.6	8	10.3	2	4.7	9
전북	14.6	1	6.3	9	5.8	9	5.1	9	7.4	5
전남	11.7	4	13.6	1	9.9	4	6.6	7	5.4	8
경북	9.7	6	7.3	8	7.4	7	7.3	6	6.1	7
경남	7.8	8	11.8	3	8.3	6	8.8	4	8.8	3
제주	6.8	9	10.9	4	11.6	2	4.4	10	4.0	10
세종	10.7	5	5.4	10	5.0	10	11.0	1	10.1	1

구분	특별교통수단 보급률		특별교통수단 이용률		고령자 및 어린이 사고율		교통복지 행정		종합	
	환산값	순위	환산값	순위	환산값	순위	환산값	순위	점수	순위
경기	7.6	3	3.2	9	9.7	2	7.3	7	75.1	2
강원	7.0	4	4.6	6	5.5	8	6.5	8	71.7	6
충북	6.5	5	6.0	3	8.3	4	8.9	5	73.5	4
충남	4.1	9	3.7	8	9.0	3	11.4	2	72.4	5
전북	4.7	8	4.1	7	4.9	9	8.1	6	61.1	9
전남	3.5	10	5.5	4	6.9	6	4.9	10	68.0	7
경북	5.3	7	2.8	10	6.2	7	5.7	9	57.8	10
경남	8.8	1	6.9	1	7.6	5	12.2	1	80.9	1
제주	8.2	2	6.4	2	4.2	10	10.6	3	67.1	8
세종	5.9	6	5.1	5	10.4	1	10.6	3	74.1	3

□ 교통복지지표 주요내용

구분	교통복지지표	분석내용
이동편의시설	교통수단 이동편의시설 기준적합율	- 지역별 가중치를 고려한 교통수단의 이동편의 시설 설치율
	여객시설 이동편의시설 기준적합율	- 지역별 가중치를 고려한 여객시설의 이동편의 시설 설치율
보행환경	여객시설 주변 접근로의 보행시설 기준적합율	- 여객시설 주변 접근로상의 보행시설 설치율
	보행자 사고율	- 보행자 사고건수
저상버스	저상버스 보급률	- 일반버스 대비 저상버스의 보급률
특별교통수단	특별교통수단 보급률	- 장애인수 대비 특별교통수단 보급률
	특별교통수단 이용률	- 특별교통수단 이용실적
교통약자 사고	고령자 및 어린이 사고율	- 어린이 사고인원 - 고령자 사고인원
교통행정	교통행정지표	- 교통약자 관련조례 재정 - 편의시설 또는 이동편의 관련 위원회 구성 - 장애물없는 생활환경 인증 - 보행우선구역 지정

해수부, 국가어항 내 사고방지 위한 안전시설물 일제정비

- 82개 국가어항에 121억원 투입...차막이 설치 등 이용객 안전성 확보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는 최근 들어 항내 차량 및 낚시객 등 인명 추락사고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이를 방지 이를 사전 예방하고자 국가어항 안전시설물 점검 및 보수·설치 등 일제정비 한다고 밝혔다.

* 지난해 12월 30일 부안에서 1명 사망, 올해 1월 4일 전남 해남·신안에서 2건의 차량 추락사고로 6명이 사망하는 등 최근 해상 차량 추락사고가 지속적 발생

이번 일제정비는 국가어항 시설물의 고유 기능유지 및 사용가능 했수(내구연한)를 늘리고, 이용자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며, 인적·물적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목적으로 실시한다.

올해 실시될 국가어항 유지보수사업은 82개의 국가어항을 대상으로 기본시설 유지보수와 안전시설 설치 및 보수에 121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국가어항의 기능보전 및 이용자의 안전성 향상을 위해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 중 국가어항 내 방문객 안전을 위하여 19개항에 47억원을 투입하여 경고표지판, 출입통제문 설치 등으로 안전사고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키고, 야간통행 및 항내 추락사고 예방을 위한 가로등 유지보수와 안전난간, 차막이 안전시설도 설치할 예정이다.

63개항에는 74억원을 투입하여 손상된 방파제, 물양장, 선착장 등 기본시설물과 배수로 덮개 및 계선주(배를 댈 때 밧줄을 걸기위한 기둥) 등 부대시설에 대해 유지보수사업을 실시하여 어업인의 안전에도 최선을 다 할 것이다.

양영진 해양수산부 어촌어항과장은 “어항시설을 이용하는 국민의 안전을 위해 모든 국가어항에 안전난간, 차막이, 안전경계표식 등 안전시설물을 지속 확대해 선제적 해양 안전사고 대응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참고1

국가어항 유지보수사업 현황

□ 사업개요

- (사업내용) '11부터 국가어항 시설물 유지보수사업을 통해 어항시설물 고유의 기능유지 및 내구연한 증대, 이용자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고 인명·재산 피해를 사전에 예방
- (예산액) '16년 12,150백만원

□ 그간 실적 및 2016년도 목표

구분	최근 추진실적			2016 목표
	2013	2014	2015	
사업비	2,000백만원	6,000백만원	12,000백만원	12,150백만원
사업량	29개항 41개시설	61개항 81개시설	80개항 136개시설	82개항 140개시설

- (추진현황) '11년부터 전국 109개 국가어항을 대상으로 '15년까지 240억원을 투입하여, 시설물 내구연한 증진 및 이용자의 안전확보에 기여
 - (방파제 안전시설물) 방파제와 조화를 이루면서 사고 시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안전시설물(진입차단문, 안전표지판, 인명구조함, 구난위치표지판) 설치하여 방문객들의 안전의식을 고취하고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



진입차단문



안전표지판



인명구조함



구난위치표지판

참고2

안전시설[안전난간, 차막이] 설치율 현황

구분	청별	시설현황	총 소요량(A)	2015년까지				2016년		
				총설치량 (B)	잔량 (C)	총파손량 (D)	설치율 [E=(B-C-D)/A]	대상항수	설치계획 (F)	설치율 [G=(E+F)/A]
안전난간 (m)	인천청	2,868	2,788	2,788	0	24	99%	0개항	0	99%
	평택청	947	790	140	650	0	18%	1개항	140	35%
	대산청	13,334	12,822	10,843	1,979	269	82%	1개항	300	85%
	군산청	11,008	9,573	9,573	0	68	99%	0개항	0	99%
	목포청	19,592	14,185	12,152	2,033	95	85%	5개항	2049	99%
	여수청	11,932	6,646	6,306	340	26	94%	1개항	340	100%
	제주청	9,080	6,564	6,242	322	28	95%	0개항	0	95%
	동해청	23,701	21,920	21,427	493	91	97%	1개항	420	99%
	포항청	20,906	18,999	18,024	975	83	94%	0개항	0	94%
	울산청	3,187	3,187	3,187	0	0	100%	0개항	0	100%
	부산청	1,263	1,263	1,263	0	0	100%	0개항	0	100%
	마산청	20,211	17,630	15,280	2,350	117	86%	3개항	544	89%
합계		138,029	116,367	107,225	9142	801	92.14%	12개항	3,793	95.40%
차막이 (개소)	인천청	1,555	1,289	1,289	0	47	96%	2개항	230	114%
	평택청	1,270	737	737	0	3	100%	0개항	0	100%
	대산청	6,309	5,781	5,781	0	510	91%	1개항	213	95%
	군산청	2,093	1,438	1,438	0	32	98%	0개항	0	98%
	목포청	8,694	6,941	6,523	418	190	91%	4개항	316	96%
	여수청	8,349	7,840	7,840	0	266	97%	1개항	53	97%
	제주청	3,392	3,392	3,287	105	49	95%	0개항	0	95%
	동해청	5,521	3,954	3,690	264	405	83%	2개항	231	89%
	포항청	7,395	6,833	5,303	1,530	613	69%	4개항	1,755	94%
	울산청	1,407	1,407	404	1,003	76	23%	1개항	236	40%
	부산청	2,603	1,765	1,649	116	32	92%	2개항	148	100%
	마산청	9,817	9,183	8,118	1,065	125	87%	3개항	662	94%
합계		58,405	50,560	46,059	4,501	2,348	91.10%	20개항	3,844	98.70%